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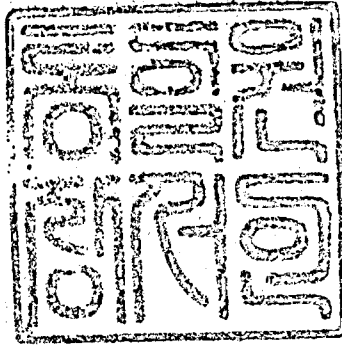
蘇聯의 亞·太 地域 經濟進出이

韓半島 統一環境에 미치는 影響

研 究 責 任

金 裕 南

(檀國大學校 教授)



統 一 院

1. 本 資料는 當院이 蘇聯의 아시아·太平洋地域 經濟 進出이 韓半島 統一環境에 미치는 影響에 대한 外部 專門家の 意見收斂을 위해 委囑한 研究結果임.
2. 이 研究 內容은 研究者의 意見이며, 當院의 公式 見解는 아님.

# 目 次

I. 序 .....	3
II. 蘇聯의 亞·太經濟進出의 背景 및 現況 .....	6
1. 極東· 시베리아地域 現況 .....	6
2. 蘇聯의 改革政策과 極東地域 開發現況 .....	11
3. 蘇聯의 經濟特區 設置現況 .....	15
4. 亞·太地域 經濟協力에 대한 蘇聯의 立場 .....	19
III. 蘇聯의 亞·太經濟進出에 대한 美·日·中의 視角 .....	28
1. 美國의 視角 .....	29
2. 日本의 視角 .....	32
3. 中國의 視角 .....	36
IV. 蘇聯의 亞·太進出과 韓半島 .....	39
1. 蘇聯 外交政策의 基調 .....	39
가. 蘇聯 外交政策의 基本目標 .....	39
나. 蘇聯 外交政策 路線의 決定要因 .....	40
2. 蘇聯의 對아시아政策 變更要因 .....	42
가. 對內的 變更要因 .....	45

나. 對外的 變更要因 .....	46
3. 蘇聯의 對韓半島政策 .....	48
가. 蘇聯의 對韓半島 基本關心 .....	48
나. 80年代 고르바초프의 對韓半島政策 推移 .....	50
다. 對韓半島政策 變化의 內容과 背景 .....	51
라. 急進展되는 韓蘇關係 .....	64
마. 韓蘇修交의 意味와 波長 .....	67
V. 蘇聯의 亞·太進出에 따른 南北韓關係 展望 .....	75
1. 韓蘇修交와 南北韓關係 .....	75
2. 韓蘇修交 이후 우리의 課題 .....	77
VI. 結論 .....	81

## I. 序

韓半島를 中心으로 한 아시아 太平洋地域은 주요강대국간의 利害關係가 얽혀 있어서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의 세력관계는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다. 특히 可變성과 不確實성이 예상되고 있는 90年代의 東北亞 國際秩序下에서 이 지역에 속해 있는 諸 國家들은 자기들의 外交政策을 決定함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주요 強大國및 周邊國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韓蘇修交에서 볼 수 있듯이 영원한 敵과 同志가 없다는 國際社會에서 相互作用 관계에 있는 各 國家는 自國利益을 증대시키기 위해 他國의 條件에 따른 外交政策을 수립할 수 밖에 없고 이를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研究와 檢討가 必要하게 된다.

특히 南北韓으로 서로 다른 體制가 존속하고 있는 韓半島는 美·蘇·中·日 等 主要強大國의 利害가 집중되어 있어 이들 有關國의 態度變化에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한반도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南北韓間의 內在的 要因과 한반도를 둘러싼 相關國간의 상호작용현상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반도 문제에 있어 陰陽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蘇聯의 外交政策에 대해 깊은 研究와 認識이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蘇聯이 韓半島를 비롯한 亞·太地域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1차적으로 그들의 內部 經濟事情으로부터 기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소련

사회의 政治的 民主化로 인하여 一般大衆의 경제적 욕구와 壓力이 상당히 커졌고 그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정치발전을 위하여 경제발전은 필수적인 것이나, 역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정치발전 역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요건이다. 이러한 순환론적 딜레마 속에서 소련은 그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로 그 눈을 돌린 것이다. 한편, 동아시아의 소련군은 중소국경지역에서 중국과 대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및 일본의 海上防衛力과 대치함으로써 경제력에 비하여 과중한 군사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있다.

蘇聯은 이러한 과중한 경비를 줄이면서 경제적으로 급속히 신장하고 있는 亞·太地域 국가들의 자원을 끌어들이며 시베리아 자원개발을 서두를 필요를 느꼈을 것이다.

따라서, 최근의 소련 極東政策의 중점은 政治, 外交的 주도권을 선두로 한 군비관리와 軍縮 및 信賴構築을 포함한 평화공세 강화에 있어 보인다.” 이처럼 韓半島를 축으로 소련의 새로운 經濟改革과 亞·太地域의 多國間 關係는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本 研究에서는 한반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소련의 外交政策중에서 亞·太經濟進出政策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

1) 金裕南, “소련의 極東 軍事安保政策과 韓半島의 安保”, 美蘇研究 제3집 (서울: 단국대학교출판부, 1989), pp. 61~85 참조.

다. 본래 外交政策이란 복잡한 과정을 거쳐 수립되는 것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諸般要因들은 매우 多樣하기 때문에 한 국가의 외교정책을 이해하려면 외교정책결정상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과 背景들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따라서, 소련의 亞·太經濟進出에 따른 韓半島 問題를 이해하기 위해서 本稿에서는 우선 정책결정과정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소련의 亞·太經濟進出의 背景 및 美·中·日의 視角을 살펴보고 本論에서 소련의 亞·太進出의 구도하에 추진되고 있는 對韓半島政策의 背景要因 및 변화의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끝으로, 소련의 亞·太進出의 가시적 결과라 할 수 있는 韓蘇修交가 統一環境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하에 소련의 亞·太進出에 따른 南北韓關係를 진단해 보고 그에 따른 우리의 과제를 살펴보았다.

## II. 蘇聯의 亞·太經濟進出의 背景 및 現況

### 1. 極東·시베리아地域 現況

極東·시베리아 地域은 西쪽으로 東經 60度の 우랄산맥에서 東으로 는 베링해에 이르는 東經 170度の 楚콥스키半島의 東端까지이며, 南으로는 北緯 42.3度の 北韓과의 國境지점에서부터 北으로는 北極海의 島嶼를 제외한 北緯 78度の 타이미르半島 北端에 이르는 韓半島 면적의 약 57배에 해당하는 광대한 地域(총면적 1,227만 m<sup>2</sup>, 蘇聯 全國土의 57%)이다.<sup>2)</sup>

極東地域과 시베리아의 구분은 통상 太平洋 分水嶺을 境界로 하고 있다. 즉 하천이 北極海 方面으로 흐르는 우랄 以東(北極海 流域 斜面)을 시베리아라 부르고 太平洋側(베링해, 오호츠크海 포함)으로 흐르는 範圍(태평양 流域 斜面)를 극동이라 부른다. 그러나 여기에서 極東地域, 시베리아地域이라고 하는 것은 經濟地域圈을 의미하며 행정 상으로는 모두 러시아 공화국에 속해 있는데 서부 시베리아, 동부 시베리아 및 극동 등 3개의 經濟區域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역은 대부분 北緯 60度 以北의 高緯度에 위치해 있어서 전체 면적의 2/3가 永久凍土地帶에 속하여 경제개발이 낙후되어 있다.

2) 國際問題調查研究所, 蘇聯의 極東·시베리아 地域現況 (서울:國際問題調查研究所, 1989), p. 17.



극동·시베리아 地域의 人口는 1989년 1月 현재 人口조사에 따르면 2,793만 6천명(시베리아 전체 人口는 2,160만, 소련전체의 9%)<sup>3)</sup> 으로 소련 전체 人口의 10.6%를 占하고 있는데 불과하다 人口密度 역시 극히 낮아서 소련 전체 平均이 12명/km<sup>2</sup>인데 반해 2명/km<sup>2</sup>에 지나지 않는다 地域別로 보면 西部 시베리아가 5명/km<sup>2</sup>이고 東部 시베리아는 2명/km<sup>2</sup>이며 極東地域(1989년 현재 소련 전체 人口의 약 3%인 717만 5천명)<sup>4)</sup> 은 1,2명/km<sup>2</sup>에 불과하다<sup>5)</sup> 이는 極東·시베리아地域의 대부분이 북위 60도 以上에 위치해 있고 永久凍土인 툰드라지대와 타이가(Taiga)라고 불리우는 밀림으로 둘러 싸여 있어 경제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적은 人口나마 시베리아 철도 연변의 도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극동·시베리아지역의 人口는 1970~79년간 14.2%의 증가를 보였는데 이 증가율은 소련 전체 증가율이 9.0%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sup>6)</sup>

그러나 전체 人口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의 10.5%에서 1979년 10.6%로 증가, 거의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 人口 증가율을 보면 극동지역이 높는데 이는 정부의 人口 유인정책에 힘입

3) Veniamin Alexeyev, *Siberia in the 20th Century* (Moscow:Novosti Press Agency Publishing House, 1989).

4) 産業研究院, 東 아시아 經濟協力 可能性과 韓國의 位相 (서울:産業研究院, 1989), p. 71.

5) 國際問題調査研究所, 前掲書, p. 37.

6) 上掲書.

어 순수 移入人口가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극동·시베리아 지역경제의 특징은 소련 전체에서 차지하는 이 지역 공업제품별 생산비중을 보면 보다 명확히 알 수가 있다. 우선 석탄 생산고가 1928년에 비해 1980년에는 거의 3배(전 소련 생산량 중 13.2%에서 37.1%)로 증대되었고 발전량도 10배(전 소련의 1.4%에서 16.9%) 증대되었다. 석유도 以前에는 사할린에서 현지 소비용으로 조금 생산되었을 뿐이었지만 현재의 이 지역은 소련의 주요 석유·천연가스 채굴기지가 되었다. 많은 비철금속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戰前에 자바이칼제철소 1개만 건립되어 있었던 이 곳은 철강 부문에서도 이제는 소련의 주요 철강 기지의 하나가 되었다. 이와같이 많은 공업부문에서 극동·시베리아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대되어 왔다.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물질적 기초인 중간상품으로서 생산되는 原·燃料工業이 전 공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1975년)은 서부 시베리아지역이 48.4% 동부 시베리아지역이 59%, 극동지역이 39.5%나 된다.”

오늘날 소련과 사회주의 諸國간의 경제가 순조로이 기능하고 있는 데에는 극동·시베리아지역의 역할이 매우 크다. 극동·시베리아지역으로 부터 사회주의諸國에 대해 에너지, 연료, 원료, 철강제품, 非鐵金屬品, 기계, 임업제품, 펄프, 공업제품, 농산물 및 어업제품등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경제기능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소련 국민경제와 관련, 소련 정부는 소련 전체의 수요 증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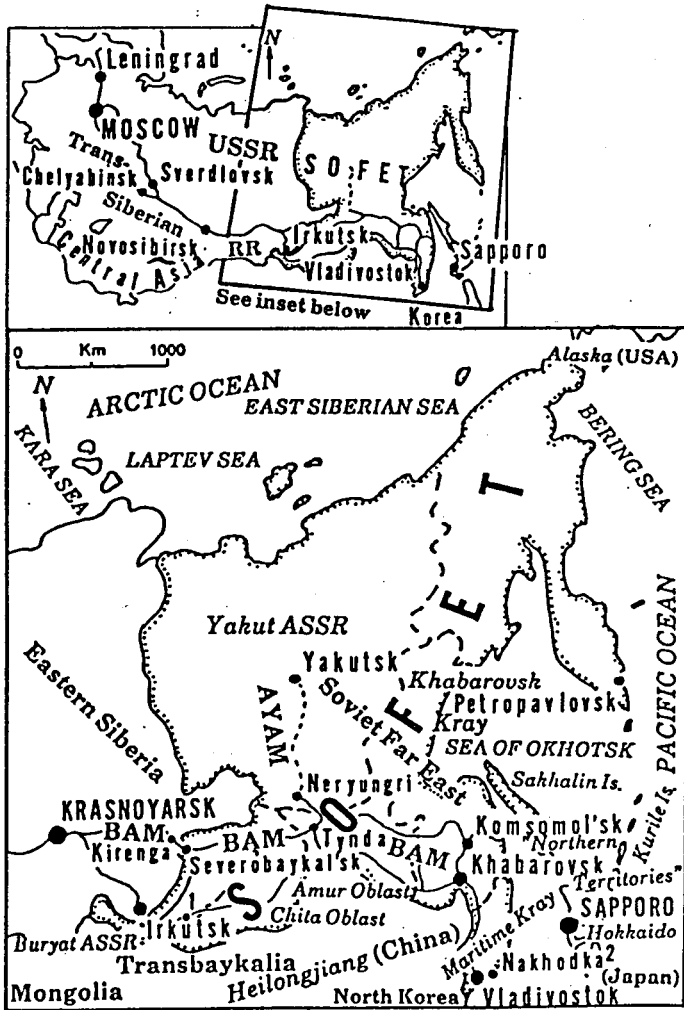
7) 上掲書, p. 61.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극동·시베리아지역의 천연자원 개발 규모를 확대하고 경제구조의 합리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와 동시에 극동·시베리아지역에 에너지 다소비형 내지는 원재료 다소비형 생산을 집중시키는데 그치지않고 대량의 연·원료를 서부지역으로 확대 공급케 함으로써 지역간 분업의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도모해 왔다.

동 지역은 방대한 천연자원이 보유되어 있어 소련경제 잠재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바, 석유는 소련 전체매장량의 65%, 천연가스 67%, 석탄 91.4%가 각각 매장되어 있으며 삼림자원의 70%가 부존 또는 매장되어 있고 어획고는 소련 총 어획고의 50%에 해당하는 양을 차지한다.<sup>8)</sup> 이외에도 동, 니켈, 금, 다이아몬드, 텅스텐, 철광석 등 다양한 광물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이와같은 경제적 입지조건으로 인해서 동지역은 60년대 후반이후 소련의 새로운 자원개발 중심지로 급격히 부상하여 현재, 금후 소련경제의 중추지역으로의 발전을 위한 개발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그림1)

8) 産業研究院, “共產圈經濟”, 제3권 제2호 (서울:産業研究院, 1990), p. 83.

(그림1) 극동·시베리아 지역도



<sup>1</sup>Petrovsk-Zabaykal'skiy <sup>2</sup>Vostochnyy

\* (Chita Oblast and Buryat ASSR)

출처: Victor Mote, "USSR-South Korea-USA: Potential Consortia in the Soviet Far East," *Cendte*, for American & Soviet studies, *Proceedings of 2nd Int'l Conference* (Seoul:1990)

## 2. 蘇聯의 改革政策과 極東地域 開發現況

소련 개혁정책의 배경을 살펴보면 소련은 1950년대 후반부터 그 동안의 과도한 중공업화에 따른 경제의 歪曲化를 시정하기 위해 경공업 및 농업진흥, 국민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하였으나 실패로 끝나고,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공업생산의 成長低下, 농업부진으로 인한 경제성장 鈍化 및 소비재 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측면에서 기인되었다. 첫째, 경제발전 에 따라 中央計劃委員會의 우선 순서로 결정된 공급구조가 수요구조와 일치하지 못하게 되었다. 둘째, 외연적 성장전략(투입확대에 의한 생산 확대)을 뒷받침해 오던 생산요소 공급상황이 변하였다. 즉 우랄 以西의 석유·가스田이 고갈되자 소련은 1963-64년부터 서부 시베리아 석유·가스田의 증산을 시작하였으나<sup>9)</sup> 1980년대 초에 이르러 서부 시베리아의 기존 석유·가스田의 증산에 한계가 나타남에 따라 새로운 유전·가스田의 개발에 따른 자본 비용이 상승하게 되었다.

이에 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의 유지와 국민수요의 충족을 위해서는 경제정책을 효율과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한 고르바초프 개혁의 기본방향은 中央計劃管理機構의 기능변화와 간소화, 完全獨立採算, 자기자금조달, 자기관리를

9) 시베리아 개발에 관해서는 李徹, 시베리아 개발사 (서울:民音社, 1990) 참조 바람.

통한 기업자주권 확대, 행정적 관리방법에서 경제적 관리방법으로의 이행, 집중화, 전문화, 생산협동화를 위한 합리적인 경제관계 형성, 관리의 민주화를 통한 책임제 확립 및 경제조직의 의무 명료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고르바초프 개혁의 특징은 국가 전략부문에 대해서는 中央集權이 강화되나, 여타 부문에 대해서는 분권화 및 市場原理가 도입되고 그 이외에도 私營부문의 합법화와 국제경제와의 통합이 촉진된다는 점에 있다.

극동경제는 현재 소련에서 진행중인 근본적인 경제개혁과 관련하여 양대 과제를 안고 있다. 그 하나는 경제전체와 관리메카니즘의 개혁, 즉 국민경제의 일부분으로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뼈레스트로이카의 추진이며, 그 둘은 극동지역 경제의 가속적 발전을 위해 지역적 특수조건을 반영하여 새로운 경제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 경제전략은 바로 1987년 9월에 발표된 '2000년까지의 극동 경제지역, 브라트 자치 공화국, 치타州的 '생산력발전 국가장기프로그램'에 나타나 있다.

극동의 경제전략은<sup>10)</sup> 소련 경제시스템과의 관련속에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태평양지역과의 경제관계 강화를 도모하는 소련의 경제전략의 한 요소로서 추진되고 있다. 즉 극동지역

10) 소련의 극동경제전략에 대해서는 P. Minakir, O.Renzin and V. Chichkanov, *Ekonomika Dal'nego Vostoka* (Khabarovsk:Khabarovskoye Knizhnoye Izdatel'stvo, 1986)를 참조할 것.

은 소련경제의 중심지보다 태평양의 경제중심지에 훨씬 가까우며 따라서 극동지역은 太平洋 諸國과 경제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국내에서의 지역간 협력강화와 아울러 태평양지역과의 경제관계 강화를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극동경제의 가속화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극동·시베리아 개발과정을 살펴보면, 극동·시베리아 개발은 제1차 5개년계획(1928-32년) 이후 쿠즈네츠 탄전(서부 시베리아)을 중심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으며 第2次 世界大戰 중에는 공업시설 疎開와 군수산업 투자증대로 개발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50년대 중반 이후 부터는 제20차 당대회(1956년 2월)를 계기로 시베리아 자원의 집중개발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서 7개년계획(1959-65년) 기간 중 총 투자의 40%가 투입되는 등 자원개발을 보다 적극 추진하게 되었으며 제9차 5개년계획(1971-75년) 때에는 시베리아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우스트일리아 대형 수력발전소 (동부 시베리아), 옴스크 정유공장, 크라스노야르스크 채련공장 (서부 시베리아) 등을 건설하고 철도 및 석유 파이프라인을 확충했다. 제10차, 11차 5개년 계획 기간중에는 바이칼湖로부터 아무르江 하류에 이르는 총 연장 3,200km의 BAM철도가 1984년 11월 착공 10년만에 완공되었다. 이 철도는 태평양까지 연결되어 태평양 지역국가와의 통상에 이용될 계획이다.<sup>11)</sup> 제27차 당대회(1986년 12월)에서 적극적인 지질탐사 추진을

11) 심성섭, “소련의 시베리아 개발과 한·소 경협가능성,” 이코노미스트 88. 2. 20., p. 38.

결의한데 이어 고르바초프가 블라디보스톡선언(1986년 7월)을 통해 同 地域 開發이 소련 국민 모두의 과업이라고 강조, 개발지침을 제시함에 따라 개발구상이 구체화 되었다. 고르바초프의 개발지침(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에너지 자원의 집중개발, 극동해역 개발로 수산업 발전, 金, 銀 등 非鐵金屬, 森林資源 개발, 주택건설, 식량의 자급자족 등 사회환경개선, 산업의 하부구조 건설, 수출 잠재력의 우선 개발, 태평양 연안국들과 경제관계 발전, 합작기업 후원, 국제적인 文化개발 및 高緯度 海上 관광지화)에 의거 2000년까지 長期 極東綜合開發計劃이 채택(1987년 8월 蘇聯 國家計劃委員會 발표) 되었다.

〈표 1〉 시베리아 주요 에너지·광물자원

주요 자원	추정매장량	생산량(1987년 추정치)
석유	90억톤	785만 배럴 / 日
천연가스	32兆 m <sup>3</sup>	4,600억 / m <sup>3</sup>
석탄	2,040억톤	3억톤
철광석	쿠즈바스 磁鐵鑛 25억톤 Fe 38%철광석 수십억톤	1,500만톤
동	우도칸 7억톤	

출처: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Siberia and the Soviet Far East: Resources for the Future*, 1984.

CIA,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al Review*, 1988.



이 계획의 주요 핵심은 2000년까지 동부 시베리아의 치타州, 브리야트 자치공화국과 극동지역에 대해 총규모 2,320억루블을 투입, 부존자원 개발, 산업의 하부구조 및 주택건설, 식량 자급자족등을 추진하는 것이며 개발목표는 2000년까지 동 지역을 소련 他地域 평균보다 높은 경제·사회적 환경으로 발전시키고 극동경제를 태평양 분업체제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이와같이 극동·시베리아를 개발시키려는 소련의 의도는 방대한 부존자원<sup>12)</sup>을 개발하여 소련의 새로운 산업기지로 발전시킴으로써 2000년대의 사회주의 경제강국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경제협력을 架橋로 삼아 亞·太地域 국가들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扶植하고 亞·太國家로서의 立地를 공고히 하며 서부전선과는 별도로 亞·太地域에서 “第 2戰線”을 독립운영할 수 있는 극동군의 전력과 병참능력을 제고하려는 등의 복합적 저의를 내포하고 있다.

### 3. 蘇聯의 經濟特區 設置現況

소련은 대외개방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의 獨立採算制를 강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財政, 稅制, 金融, 投資등에 대한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對外經濟活動에서 얻은 外貨를 지방경제발전에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의 대외경제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자는 것이다.

12) 표1 참조, 産業研究院, 前掲書, p. 85의 표6 재인용.

소련은 지방의 효과적인 지역개발정책으로서, 일정 기간중 특정지역에 있는 기업의 이익이나 수출소득에 대한 控除를 유보하고, 합작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綜合經濟開發을 구상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經濟特區(Special Economic Zones)에 관한 구상이다.

최근 2-3년동안 蘇聯의 개방정책에서 가장 커다란 관심을 모아온 것은 合作企業의 설립이었다. 그러나 합작투자는 地域政策的인 측면에서의 문제를 안고 있다. 즉, 합작기업의 50%이상이 모스크바에, 7%가 레닌그라드에, 6%가 에스토니아에, 5.5%가 우크라이나에 설립되었고 극동지역에는 약 30개가 설립되었으나, 중앙아시아와 카자흐에는 20개도 채 설립되지 못하였다<sup>13)</sup> 이러한 合作企業設立의 지역적 편중 현상은 외국자본이 투자환경이 劣惡한 지역에 대한 투자를 기피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련은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여 地域開發政策에 활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投資形態를 모색하고 있는데 이중 유망한 것이 ‘經濟特區’인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自由經濟地域’(Free Economic Zones) 과 유사한 소련의 경제특구에 관한 案은 1986년부터 구상되어, 소련 정부는 발틱, 흑해연안(오데싸) 및 극동의 해안지대(블라디보스톡, 나호드카 등) 에 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을 고려해 왔다. 특히 예브게니 프리마코프같은 이들은 東시베리아 및 극동의 全地域은, 완전한 자치권을 가지고 북태평양의

13) 産業研究院, “共産圈 經濟” 제3권 1호 (서울:産業研究院, 1990), p. 50.

여러국가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超經濟區'(Super Economic Zone)<sup>14)</sup>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리하여 1988년말 경제특구 실행을 위해서 매우 고무적인 법안이 통과되었으나 몇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이 殘存하고 있다. 즉, 하부구조 (Infrastructure)의 취약, 외국투자자들에게 대한 법적 보호의 미비 및 舊式 관세법규의 殘存 그리고 루블화의 不兌換性등이 그것이다.<sup>15)</sup>

여하튼 소련의 의도는 경제특구지역에 자원을 집중하고, 質 높은 노동력과 經營人力을 투입함으로써 단기간내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所期의 목적을 달성하자는 것이다.

經濟特區는 단순히 租稅, 關稅上的 優待措置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蘇聯企業, 合作企業, 外國企業의 모든 이해관계를 조정해 줄 수 있는 治外法權的인 경제관리시스템이 운용되는 곳이다.

즉, 經濟特區는 社會間接資本, 情報, 交通, 金融, 物資, 技術上的 優待뿐만 아니라 소련시장에 대한 진출, 이윤의 外貨로의 교환 및 해외송금, 소련 국내에서의 재투자 등을 보장함으로써 소련 경제특구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여 외국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소련 경제특구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경제특구가 국내경제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업들이 특구내 外貨사정을 고려하여 수출보다는 주로 소련시장을 대상으로 활동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특구의 당면과제는 해당지역의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미개

---

14)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89년 2월 2일.

15) Korea Herald, 1989년 11월 11일.

발부분을 육성하며, 중앙의 資金에 의존하지 않고서 생산재와 소비재를 特區에 충분히 공급하며, 경제 특구를 소련 국내의 경제권에 편입시켜 수출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이다. 이를 위해 소련은 경제특구 설치운영을 對外經濟關係를 強化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까지 평가하고, 경제특구에 진출할 외국기업들에 대해 최초 3년간의 稅金을 전면 면제하고, 그 후의 세율을 10%以下로 抑制하며, 외국인인 合作企業社長에 就任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特惠를 提供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같은 개발의욕 속에 소련이 경제특구 후보지로 삼고 있는 地區는 핫산, 나호드카, 구로데코보, 南사할린, 페뜨로파브로브스크, 마가단, 와니노, 데카스토리, 바제무스키, 우다야 자치州, BAM철도 周邊 地區 등이 있다. 경제특구 후보지 선정을 놓고 極東의 自治公화국과 自治州 소비에트執行委員會가 경쟁을 벌이고 있어 특구선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sup>16)</sup>

이러한 과정속에 소련의 對外經濟委員會 副委員長인 이반 이바노프는 경제특구 지역으로 레닌그라드 西北쪽의 브이보르그(Vyborg) 부근과 極東의 나호드카 地域등 2個地域이 공식지정되었음을 밝혔다.<sup>17)</sup>

두개의 經濟特區中 前者의 경우는 산업 및 과학활동을, 그리고 後者는 原資材精密加工處理 등을 위해 설치되는 것으로 알려 졌다.

그밖에 1989년 9월 22일 소련은 “자유무역지대 및 합작기업지구에

16) 内外經濟新聞, 1989년 8월 13일.

17) 内外經濟新聞, 1989년 9월 24일.

관한 국제세미나”에서 極東의 나호드카, 北西地方의 노브고로드 및 브이보르그地域등 3個地域을 合作企業地區로 實驗的으로 指定하였다고 밝힌바 있으며, 러시아共和國 最高會議는 蘇聯內 經濟特區 設立을 위한 최초의 실제적인 措置로서 레닌그라드(Leningrad), 브이보르그(Vyborg), 칼리닌그라드(Kaliningrad), 치타(Chita), 사할린(Salhalin) 州 및 연해주지방을 經濟特區로 지정 공포하였다.<sup>18)</sup>

#### 4. 亞·太地域 經濟協力에 대한 蘇聯의 立場

지금까지 소련은 유럽을 外交的 측면이라는 관점에서 최우선적인 고려의 대상으로 간주하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소련은 그 영토의 1/3이 아시아대륙에 위치 있다는 점 이외에는 어떤 다른 타당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시아지역의 합법적인 一部로서 간주되기를 渴求해 왔다.<sup>19)</sup>

이와같이 東北亞가 전통적으로는 소련의 외교정책 순위에서 낮은 위치를 차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부분적으로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이 개발되면서, 이지역의 전략적, 정치적, 경제적 연계가 확대됨으로 해서, 동북아는 과거 어느때 보다도 소련의 우선 순위

18) 국제민간경제협의회, “北方經濟소식” 제42호 (서울:국제민간경제협의회, 1990), p. 10.

19) 河萬環, “소련의 동 아시아 정책,” 金漢教(外)著, 한반도의 통일전망 (서울: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6), p. 129.

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sup>20)</sup>

소련이 동북아에 관심을 기울이는 만큼이나 동북아는 현재 한반도를 중심으로 美·日·中·蘇의 세계 최강대국들의 힘이交叉되는 요충지로서, 그 價値가 증대되고 있음은 周知의 사실이다.

이 지역은 地政學的 측면 뿐만아니라 경제적 측면 등에서 볼때 域內 국가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곳이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동북아는 일본의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태평양 시대를 맞고 있다. 따라서, 美·日의 海上交通路의 安全確保, 소련의 「시베리아」 개발계획의 추진 등을 고려할 때 이 지역에서의 안정과 세력균형의 유지는 관계국가의 死活에 관계되는 중요한 이익이 아닐수 없다.<sup>21)</sup>

고르바초프의 아시아·태평양지역에 對한 對外政策은 汎世界的으로 이 지역에서 確固한 美國의 影響力에 制動을 가하고, 美國을 주축으로 한 亞·太地域에서의 상황변화가 국내개혁정책 추진에 壓力 要素로서 등장하지 않도록 促求하는 데에 있고, 지역적으로는 소련의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이 지역 국가들과의 經濟協力을 促求하기 위한 분위기 쇄신과, 이에 대한 압력 또는 障礙가 되고 있는 이 지역 국가와의 관계 再定立 및 軍事戰略的인 面에서 이에 기반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동맹관계의 강화책으로 볼 수

20) 安澤源, “한국의 시각에서 본 美·蘇강대국의 동아시아 세력경쟁,” 金達中 (編), 소련의 동아시아 정책과 한반도 (서울:법문사, 1987). pp. 70-71.

21) 국방대학원, “政策報告書” 통권 74호 (서울:국방대학원, 1984), p. 41.

있다.<sup>22)</sup>

소련이 스스로 아시아·태평양 국가임을 선언하고 태평양 경제협력회의(PECC)에 가입의사를 표명한 것은 고르바초프가 집권한 후인 1986년 7월 블라디보스톡 선언을 통해서였다. 이전까지 소련은 아·태 협력구상이 일본의 경제적 제국주의企圖와 미국의 反蘇 軍事블럭추진을 위한 美·日 양국의 共謀라 비난해 왔었다. 소련의 지금과 같은 태도변화가 페레스트로이카 政策推進의 일환임은 周知의 사실인데, 특히 태평양지역국가와의 경제협력 확대를 통하여 각종 자원이 풍부한 시베리아·극동지역을 개발하고 산업구조를 개편하여 수출잠재력을 강화, 궁극적으로 극동지역경제의 성장을 소련경제의 활성화와 연계시키기 위하여 아·태 경제의 잠재력 활용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美·日·中 等 주변 강대국들은 亞·太 경제협력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면서도 이지역에 대한 소련의 참여에는 지금까지 미온적이었는데, 이번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한·소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의 지원태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들 주변 강국들이 향후 고르바초프의 아시아 질서개편에 관한 이니셔티브에 소극적 자세를 버리고 政治·經濟的 政策對應에 각기 나름대로 질적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근래 亞·太 地域의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력은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인데, 이지역의 GDP(Gross Domestic Product)가 세계에서

22) 李崇熙, “고르바초프의 權力地位와 그의 改革政策,” 동아연구 11집 (서울: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987), p. 119.

차지하는 비중이 1970년의 46.6%에서 1986년에는 52.2%로 증가하여 세계의 절반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수출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70년에 29.9%, 1980년에 31.1% 그리고 1987년에는 37.5%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1980년을 기점으로 總貿易額에서 태평양권이 대서양권을 앞지르게 되었다.<sup>23)</sup>

소련은 亞·太 地域의 이러한 경제적 位相을 감안하여 블라디보스톡선언 이후 이 지역에서의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보여 왔는데, 1987년 12월 美·蘇정상회담에서는 全 아시아 포럼 (All Asian Forum) 開催를 공식적으로 제안하였고 1988년 9월 고르바초프의 크라스노야르스크연설에서는 시베리아·극동지역에서의 경제특구 및 대외 경제 협력기구 설치를 내걸고 외국기업의 참여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앞서 1988년 3월에는 '亞·太經濟協力 소비에트 國家委員會' (SOVNAPEC)를 창설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었던 韓蘇頂上會談은 탈냉전의 국제기류가 구체화되고 있는 亞·太 地域에서의 정치·경제적 利害關係를 反映하여 한반도의 緊張緩和를 토대로 한 경제협력의 확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소련은 亞·太經濟圈에서 제외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대로 근래 소련이 시베리아·극동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이 지역과의 경제협력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는데다가,

---

23) 韓光洙, "韓蘇關係 改善과 亞·太 經濟協力," 共產圈 經濟 제3권 제2호 (서울:산업연구원, 1990), p. 102.



미국이 이번 와싱턴 美蘇頂上會談에서 소련과 貿易協定을 체결하는 등 소련에 대한 경제협력 대응태도에 변화를 보이기 시작함으로써 미국이 소련의 亞·太地域 經濟協力 참여에 종래 취해왔던 否定的 태도를 바꿀 것으로 보여 향후 소련이 이 지역 경제권에서 점차 역할을 증대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亞·太地域內에서 활동중인 주요협력기구를 보면, 실업인을 중심으로 한 太平洋經濟協議會(Pacific Basin Economic Council:PBEC), 경제학자들로 구성된 太平洋貿易開發會議 (Pacific Trade and Development Conference:PAFTAD) 그리고 學界, 實業人, 官界의 3元的 協議機構인 太平洋經濟協力會議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nference:PECC) 등이 있고, 이외에도 아세안과 域內 선진 5개국으로 구성되는 '6+5會議', 아시아·태평양 議員聯盟(PSA), 亞·太商工會 議所聯合會(CACCI) 등이 있으며, 이들은 域內主軸機構라 할 수 있는 '太平洋 經濟協力會議 (PECC) 및 太平洋經濟協議會 (PBEC) 를 중심으로 相互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sup>24)</sup>

앞으로 소련은 이러한 民間機構들에 참여하거나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이러한 民間 機構들을 政府次元의 공식적인 協議體로 발전시키려는 최근의 여러가지 초보적인 構想에도 참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소련을 제외한 아·태지역 경제권은 日本, 아시아 신흥공업국, 아세안, 中國등 아시아·태평양 지역국가와 미국, 캐나다를 중심으로

---

24) 上掲文, p. 103.

한 美·태평양 지역국가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등의 太平洋 島嶼 國家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같은 국가 구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태지역 경제권은 정치적,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을 지니며 경제 구조 및 규모와 발전단계가 상이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이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경제협력체들이 거의 공통된 文化的·歷史的 배경과 경제발전 단계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전개되어 온 것과는 달리 이 지역 경제권은 相互補完關係에 따른 경제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근래 소련이 이 지역 국가들 특히 중국, 호주, 아세안 국가, 일본 및 한국등과 정치·경제적 교류를 강화해 오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中蘇頂上會談<sup>25)</sup>을 계기로 한 중소관계 정상화, 중소 국경지역 주둔군의 감축, 태평양에서의 기동훈련 축소, 베트남에 대한 캄푸치아 주둔군의 철수압력, 그리고 韓蘇頂上會談 및 한국과의 관계진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소련의 태도변화에 대하여 亞·太地域 관련 국가들은 대체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의 경우, 실질적인 獨自外交路線을 추구하기 위하여 소련과의 관계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아세안국가들은 이 지역에 대한 소련의 참여로 美·中·蘇 세력 균형을 꾀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일본은 북방영토의 반환문제와

25) 등소평과 고르바초프는 1989년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정상회담을 실현시켰다. 이에대한 자세한 내용은 崔宜喆, “中國의 對亞·太政策,” 외교 제10호 (서울:한국외교협회, 1990)을 참조할 것.

소련시장 진출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한편, 소련은 페레스트로이카 추진과정에서 경제구조 개편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자재가공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술을 한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신흥공업국에서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기고 있다.

이렇듯 서로의 이해관계가 긴밀히 얽혀있는 亞·太地域의 諸國家들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소련의 노력은 1987년 7월에 채택한 「極東綜合發展計劃」<sup>26)</sup>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소련은 2000년까지 극동지방의 사회발전 諸指標을 蘇聯內 他地域의 평균 지표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극동의 산업구조를 개선하며 태평양 지역의 분업체제 속에 극동경제를 편입시킨다는 것이다. 즉 소련의 기본적 구상은 앞으로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 태평양 연안 선진국들과 아시아 신흥공업국, 특히 한국의 참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소련은 亞·太經濟社會委員會(ESCAP)와 太平洋經濟協力會議(PECC)<sup>27)</sup>를 위시한 태평양 공동체의 국가경제조직에 참여하여

---

26) 이 계획에 따르면 계획기간은 1987년부터 2000년까지이고 계획대상지역은 극동 경제구, 브라뜨자치 공화국 및 치타州이며 투자규모는 2,000억 루블규모이다.

27) 太平洋經濟協力會議(PECC)는 일본의 오히라 전수상과 호주의 프레이저 전수상의 합의로 1980년 10월 호주의 국립대학교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는데 域內國家들의 학자, 정부관리 및 경제지도자들의 혼성회원으로 구성되어 탄생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강태훈, “한국과 ASEAN 관계,” 외교 제6호 (서울: 한국외교협회, 1988)을 참조.

이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소련은 ESCAP 域外加盟國이고 PECC 의 경우는 가맹국은 아니지만 작업그룹의 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1988년 3월에 설립된 亞·太경제협력 소련위원회는 소련의 亞·太地域內 국제분업문제를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시베리아·극동지역과 미국의 태평양 연안지역의 협력가능성도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소련은 시베리아·극동지역의 대외경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잠재적 협력파트너는 일본이라 생각하고 있다. 일본과의 협력이 갖는 중요성은 큰 시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 뿐만아니라, 세계적 수준인 일본의 技術 및 풍부한 자본력을 결합시킬 때 동북아 경제권의 기반을 통해 다면적인 국제분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이라 생각하고 있다. 한편 소련은 한국을 판매시장으로서 뿐만아니라 科學技術, 生産協力이라는 측면에서 일본을 대신할 수 있는 유망한 파트너로 지목하고 있다. 즉 소련은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代案으로 간주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소련과 한국의 경제구조간에 相互補完性이 있다는 점과 한국기업가들이 소련과 상호호혜적인 경제협력을 발전시키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소련은 한국과의 관계를 통해 亞·太地域 전체와의 협력에 주목하고 있고, 이에따라 多國間·多方面的 경제협력에 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극동지역에서의 韓·蘇間 協力は 향후 남북한의 공

동참여 가능성을 예견케 하고 있다. 이미 시베리아 극동 개발에 韓·美·日 기업이 協力하여 사할린과 연해주에서 천연가스 개발사업을 추진중이며,<sup>28)</sup> 남북한과 소련의 三者間 경제협력 가능성에 대한 소련측의 입장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 두만강 하구지역의 경제개발을 추진하여 소련의 핫산지구와 연계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실도 주목된다. 요컨대, 蘇聯·北韓·中國이 그들의 접경지대를 새로운 經濟特區로 발전시켜 나가고 여기에 日本과 韓國의 進出을 보장하게 되면 이 지역에서 새로운 東아시아 經濟協力 形態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

28) 현대그룹은 사할린 및 야쿠츠티지역에 매장된 천연가스를 개발하고 이를 북한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는 문제에 대해 소련주재 북한대사가 최근 소련당국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이사업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일보, 1990년 11월 16일.

### Ⅲ. 蘇聯의 亞·太經濟進出에 대한 美·日·中의 視角

韓·蘇關係의 개선이 소련으로서는 亞·太政策의 전체적인 구도아래 진행되는 것이고 또한 소련의 亞·太政策이 美·日·中등 주요 관련국과의 지속적인 협의없이 실현될 수 없다고 한다면, 한소관계의 개선은 이에 관련된 美·日·中의 이해관계의 조정이 어떤 형태로든지 사전에 협의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想定과 무관하게 이해될 수는 없다. 즉 韓半島를 둘러싼 힘의 균형의 유지라는 기본전제아래 冷戰體制의 종식이라는 세계정세의 변화에 따라 한반도에서의 緊張緩和가 追求되면서 한소관계의 개선이 실현될 수 있었다고 할 때, 美·日·中의 對韓半島政策의 전개와 한소관계 개선은 동일한 틀 안에서 상호관련을 맺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韓蘇頂上의 만남이 美蘇頂上會談직후에 이루어졌다<sup>29)</sup>는 것은 東歐의 개혁을 둘러싼 美·소간의 折衷과 일정하게 연계되면서 亞·太地域 내지 東北亞地域을 둘러싼 절충이, 예컨대 北韓에 대한 소련의 軍事的 支援의 減縮, 駐韓美軍의 段階的 撤收, 한국과 소련 및 북한과 미국의 關係改善등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소련의 亞·太 경제진

---

29) 미·소 정상회담은 1990년 5월 31일 부터 4일간 워싱턴에서 개최되었고 이어서 1990년 6월 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한·소 정상회담이 개최된 바 있다.

출에 대한 기본적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美國의 視角

전통적으로 미국은 대서양 重視政策을 추진해 옴으로써 對外政策上 亞·太지역의 위상은 1970년대까지 2次的 순위를 점할 따름이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 미국정부는 1983년 국제전략연구소(CSIS)에 위탁하여 亞·太문제 연구를 본격화하기 시작하였고, 1984년에는 국무부 內에 태평양담당 대사직을 신설하고 PECC의 미국위원회를 창설하는 등 이 지역에 대한 인식을 고조시켜 왔다.<sup>30)</sup>

이처럼 이 지역에 대하여 미국이 적극적인 태도를 표명하는 배경으로는 미국의 경제력이 약화되어 가는 추세 속에서 무역불균형해소 등을 위해 域內各國의 상대적 역할 증대에 대응하는 한편, 소련이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이 지역에 대한 경제우선의 접근 전략을 추진해 나가고 있어 域內 기존 우방과의 결속을 강화하여 새로운 상황에 대처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는 사실등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소련과의 경제협력에 대해 상반된 시각에서 논쟁이 이어져 왔다. 國防部 또는 國家安保會議를 중심으로 한 그룹은 소련과의 경제협력을 반대하여 왔는데, 그들은 소련이 서방과의 교류를 자국의 군사력 증강에 이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합작

---

30) 韓光洙, 前掲文, p. 105.

투자를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기술이전을 통해 군사적 轉用 가능성이 큰 尖端技術이 移轉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國務部나 商務部를 비롯한 一般경제부처 및 業界를 중심으로 한 그룹은 소련의 시장잠재력과 그에 따른 기대이윤을 겨냥하여 적극적인 경제교류를 원하고 있다. 이들은 美·蘇間의 戰略的 측면과 經濟的 측면을 분리해서 대응해야 하며 東西間 긴장완화를 위해서도 경제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미국의 시베리아·극동지역과의 경제협력 문제는 이 지역 개발이 갖는 전략적 가치에 대한 판단여하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미국은 시베리아·극동지역의 개발은 필연적으로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소련의 戰力을 증강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최근 몰타 및 워싱턴에서의 잇따른 美蘇頂上會談<sup>31)</sup>을 계기로 시베리아·극동지역개발에 대한 평가기준을 군사적 측면은 물론 정치·외교 경제적 변수들 까지 폭넓게 고려해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시베리아·극동지역과의 경제협력이 어느 정도 소련의 戰力을 증강시킬 위험성도 부정할 수 없겠지만, 궁극적으로 소련의 對西方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동서간의 상호의존을 심화시켜 결과적으로는 소련의 체제개혁을 촉진하는 한편 對西方 신뢰를 증대시켜 장기적으로 국제평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최근 美蘇間의 화해 분위기 고조에 기인하

31) 몰타회담은 1989년 12월 2일부터 3일간, 워싱턴 정상회담은 1990년 5월 31일부터 6월 3일까지 4일간 개최된 바 있다.



며 향후 더욱 큰 설득력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미국은 한국의 시베리아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진출에 대하여 그동안 표면적으로는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내심으로는 급속한 진전을 반대해 왔다. 사실 미국이 전통적으로 한국을 ‘反共堡壘’ 즉 미국 영향권의 對蘇防禦를 위한 교두보로 인식하여 왔음을 감안하면 한·소관계가 미국과 독립적으로 진전되는 상황은 환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조차 변화하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국제 질서와 美蘇의 화해분위기에 따라 韓蘇關係의 進展을 현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막을 만한 명분도 없다. 다만, 한·소관계 개선에 對應한 미국의 카드는 美·北韓 關係改善이라 할 것이다.

여하튼 미국은 최소한 한반도에서의 힘의 均衡이란 차원에서 소련의 한국에 대한 새로운 위상 형성에 상응하는 수준의 관계진전을 北韓에 대해 시도할 것인바, 보다 구체적으로는 주한미군의 철수, 北韓의 核安全協定에의 加入<sup>32)</sup>의 문제에서 부터 경제적 교류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북한과의 접촉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같은 미국의 태도에 대해 北韓으로서도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접촉이 갖는 기존의 의미부여를 확장한다는 취지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소관계 개선으로 인해 야기된 軍事·外交的 不均衡을 시정한다는 취지에서 보다 전향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32) 이와관련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訪日 중인 IAEA 사무국장 한스·브릭스씨가 밝힌 바 있다. 한국일보, 1990년 11월 3일.

## 2. 日本의 視角

시베리아·극동지역을 비롯한 日·蘇 경제협력 관계는 지금까지 대체로 停滯狀態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日·蘇間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북방 島嶼문제에 있으며, 이로인하여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 소련은 美國, 中國, 西歐등과 상당한 관계진전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일본과는 이렇다할 변화를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다. 日·蘇 경제협력<sup>33)</sup>이 정체상태에 있는 또다른 이유는 COCOM 규제가 미국의 주도아래 소련에 대한 첨단기술 이전을 최대한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로 강력히 발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對蘇進出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경제 여건의 변화도 양국간 協力の 저해요인으로 작용했는데, 두차례의 세계석유위기를 극복하면서 일본은 서둘러 산업구조를 조정해 왔고, 이후 세계시장에서 원자재 需給難이 緩和되어 일본 산업계의 시베리아·극동개발 협력에 대한 관심은 현저하게 弱화되었다.

또한 1970년대말 이후 소련의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우선순위가 계속 낮아진 것도 저조한 日蘇 經濟協力の 배경으로 지적될 수 있다. 소련경제에서 극동지역의 상대적 위상은 비교적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사회간접설비가 현격하게 뒤떨어져 있으며, 노동력 또한 크게 부족한데다 극동의 노동생산성은 소련평균의 85%, 고정 단위당

33) 日·蘇 경제협력에 관한 문제는 V.P.Chichkanov, eds., *Sovetsko-Yaponskie Ekonomicheskie Otnosheniya v Tikhoookeanskuyu Eru* (Khabarovsk:Institut Ekonomicheskikh Issledovaniy DVO AN USSR, 1989)를 참조 할 것.

산출액은 65%선에 불과한 실정이다.<sup>34)</sup> 그러나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東西間 정치적 대립이 현저히 완하되면서 미국이 COCOM 가맹국에 대하여 1989년 5월 고성능 첨단기술 제품의 전면적 對蘇聯 수출금지를 해제한다는 방침을 표명하면서 점차 COCOM 규제도 완화되는 추세이다.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소련에서는 극동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경제 개발에 높은 投資優先順位가 주어지는 정책전환이 이루어졌고, 아세안·호주·한국·대만·등 태평양 경제권과의 교류도 활발해지는 등 양국관계를 둘러싼 국제환경이 호전되는 양상으로 바뀌고 있다.

고르바초프의 극동지역개발에 일본의 협력을 기대하는 발언은 1986년 블라디보스톡 연설을 비롯하여 기회가 있을때마다 되풀이 강조되고 있다.<sup>35)</sup> 소련은 최근 양국외상회담과 소련최고회의 대표단의 일본방문을 통한 고위급접촉을 가진 자리에서 北方領土協商에 신축성을 보이면서 日蘇經濟協力を 촉구하였다. 또한 1991년 예정되어 있는 고르바초프의 일본방문도 對日關係改善을 원하는 소련측의 강한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소련이 아시아의 중거리핵전력(INF)의 철거와 몽고주둔 소련군의 75% 철수 등의 조치를 취한 것도 日蘇關係를 보는 日本의 시각, 즉 日蘇關係改善을 양국관계만의 관점에서 보지말고 亞·太지역의 커다란 국제정세의 틀속에서 보기 바란다는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소련은 일본의 경제협력을 끌어내

34) 韓光洙, 前掲文, p. 109.

35) 1988년 9월 크라스노야르스크 연설과 1989년 5월 北京 인민대회당 연설.

기 위해서는 兩國화해의 기반이 될 평화조약의 체결이 불가결할 것으로 보고, 이미 활동중인 평화조약 교섭을 위한 상설작업그룹이 이를 내년도 고르바초프 訪日前에 차질없이 타결짓도록 독려하고 있다. 2차大戰의 교전상대국이었던 兩國은 평화조약도 맺지 않은채 1957년 2월 공동선언의 형식을 빌려 수교했는데 이것이 그동안 양국관계의 아킬레스腱으로 作用해 왔다.

소련은 평화조약을 맺을 경우 戰後 점령한 일본의 북방 4개 島嶼를 반환해야 할 형편인데 전략상의 이유로 되돌려 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간의 경제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리라는 기대는 애초부터 무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0년대 初까지 양국간의 무역총액은 10억 달러 미만에 불과했으나 1989년에는 60억 8,519만 달러로 상승하였다.<sup>36)</sup>

최근 일본은 韓蘇頂上會談등 韓蘇間 관계개선으로 한국이 뒤늦게 對蘇進出을 서두르는 움직임에 대하여 한국기업의 動向을 예의 주시하는 등 한편으로 경계하고 또 한편으로 우려하면서 교차된 눈길로 긴장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시베리아 진출에 대한 일본의 시각은 매우 복잡·미묘하다. 日本은 그들이 시베리아·극동지역 개발에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은 단기적인 경제적 實利追求보다도 南北韓間 緊張緩和와 궁극적인 한반도 통일이라는 정책적 차원에서 이 지역 협력을 대하고 있는데 주

36) 産業研究院, 共産圈經濟 제3권 2호 (서울:産業研究院, 1990), p. 110.

목하고 있다.

日蘇關係가 지난 10여년 동안 갖가지 요인들로 인해 停滯狀態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소 경제관계는 88서울올림픽을 고비로 급속하게 好轉되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이 일본의 정치적 동반자라는 관점과, 한국 경제가 일본의 경시할 수 없는 경쟁상대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소관계개선이 일본의 북방 4개島嶼 問題에 間接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일본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북방 4개島嶼 問題와 관련하여 일본이 고수해 온 對蘇聯 政經不可分原則이 북방정책을 표방하면서 추진되는 한소관계 개선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일본은 유쾌한 입장이 아닐 것이다.

소련의 對韓國 접근이 동맹국인 北韓의 存在마저 경시하는 듯한 급속한 변화를 보이자 日本에서는 이를 蘇聯이 日本에 대해 측면적 압력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강하다.

그러나 시베리아 극동지역은 그 자체가 안고 있는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資源의 寶庫<sup>37)</sup>라는 점에서 일본에게는 일찍부터 매력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경험·기술 및 자본 면에서 유리한 몫을 차지할 수 있는 일본이 한국에게 추월당하는 것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높다.

특히 韓蘇頂上會談을 前後하여 소련이 對韓半島政策에서 南北韓 交叉承認을 반대하던 종래 입장을 바꿔 한국과 역사적으로 修交를 맺

---

37) 표 1 참조.

게 되자, 日本은 지금까지 소극적이던 對蘇聯政策을 전면수정할 뜻을 비치고 北韓과의 修交를 示唆하는 등 전례없이 기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日·北韓 양국의 관계는 상당한 정도로 진전될 것이다.

### 3. 中國의 視角

中國이 亞·太地域 경제협력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블라디보스톡선언을 통해 亞·太國家임을 선언한 1986년과 시기적으로 거의 비슷하며, 이 해에 中國은 美國과 日本의 支援에 힘입어 대만과 함께 PECC에 정식 加入하였다. 아직 中國은 亞·太地域 협력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이 協力이 미국·일본에 주도되지 않고, 회원국의 外交關係를 간섭하지 않으며, 개방적이고, 경제협력에 중점을 둘 것을 희망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亞·太協力 이외에 대만에서 제기된 「大中華共同市場」이나 한국·북한·일본·소련·중국을 연결하는 「東北亞經濟圈」 구상이 거론되고 있다.

중국은 시베리아·극동지역과의 경제협력이 중국 동북지역의 개발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면서도 그 地政學的 위치로 인하여 太平洋地域에서 蘇聯의 위상을 強化시켜줄 가능성에 내심 우려하는 입장이다.

현재 중국측은 중국 동북지역과 소련 극동지역 그리고 일본간의 三角貿易을 비롯한 경제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1988년

중국당국은 동북 3省의 각 연구기관을 망라하여 길림성 장항에 동북아 연구중심을 공동설립하고 89년 봄 북경에서 東北亞經濟圈<sup>38)</sup>구상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대해 최근 소련이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나서고 있다. 이 東北亞經濟圈 構想은 오래전 부터 미·일·한국 등이 環太平洋경제협력체 구상을 심도있게 협의해 오던 배경과 일맥상통하는 논리이다. 이 두가지 구상의 특징은 한국이 그 어느 경우든 중추적으로 포함되고 거론되고 있다는 점, 즉 중·소에 의해서 제창되고 있는 東北亞 經濟圈과 미·일·호주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太平洋經濟理事會構想이 겹쳐 떠오르는 接點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동북아경제권 구상에는 북한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평화안정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이렇듯 중국은 시베리아·극동지역에 대한 경제협력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소련의 개발전략이 취약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소련이 수출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원·연료인 원자재인데 반하여 亞·太地域 국가들은 이미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자원절약 및 기술집약사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소련이 단순히 교역을 통해서 외환부족을 극복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한국의 시베리아·극동진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보면, 198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만 해도 중국은 한국과의 경제교류를 증

38) 중소가 구상하고 있는 동북아 경제권에는 중국의 동북3성과 내몽고 그리고 山東省을 비롯한 동해안 개방지구, 소련의 시베리아와 遠東지역, 일본열도 그리고 남북한을 포함하고 있다.

대시켜 오면서 북한의 입장만을 의식했을 뿐 소련의 입장은 별로 의식할 필요가 없었다. 그만큼 韓蘇間 경제교류는 韓中間 교류에 비해서 늦게 시작되었고 내용면에서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그 양상이 크게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천안문사태와 韓蘇頂上會談이라는 사건으로 韓中間 경제교류는 둔화되는 추세로, 그리고 韓蘇間 교류는 급진전되는 상황으로 바뀐 것이 그것이다.

韓蘇頂上會談에 대해 중국은 매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남북대화 촉진과 한반도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환영한다면서 긍정적인 태도를 표명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을 의식하여 한국과의 관계개선에서 소련을 앞지르지는 않겠지만 실리적인 이익은 놓치지 않을것으로 관측된다.

1989년 현재 韓中교역규모는 31억달러로 韓蘇교역량 6억 달러의 5배가 넘는다.<sup>39)</sup> 또한 1989년 한해동안 한국인 1만 2000명이 중국을 다녀 오고 중국인 9,300명이 한국을 방문하는 등 인적, 물적교류는 소련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sup>40)</sup> 중국은 한소관계 개선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北韓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며 또 처리되는지를 지켜보고, 소련의 先例를 참고하여 한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철저한 ‘實利外交’를 펼 것으로 보인다. 한편에서는 한국의 시베리아·극동지역과의 경제협력 증대가 南北韓과 中蘇間의 政治的 안정과 나아가 남북 대화를 촉진하는 觸媒劑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39) 韓光洙, 前掲文, p. 115.

40) 上掲文.



## IV. 蘇聯의 亞·太進出과 韓半島

### 1. 蘇聯 外交政策의 基調

蘇聯의 對아시아政策의 一環으로서 對韓半島政策을 檢討하기 위해서는 우선 蘇聯의 外交政策에 關係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아시아의 北方과 유럽의 동쪽을 차지하며 세계 최대의 국토면적을 가진 소련은 무려 12개 국가와 國境을 접하고 있다. 게다가 국가 내에 50여개의 多數民族이 거주하고 있어 外交政策 決定時에 많은 要因이 相互作用을 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소련의 외교정책은 때에 따라서 많은 모순과 복합성을 띠게 된다. 때로는 自國의 國家利益을 따르는가 하면, 理念에 左右되기도 한다. 또한 非合理的으로 行動할 때가 있는가 하면 合理的으로 行動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같은 소련 외교정책의 변화도 그 推進目的과의 關聯下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 가. 蘇聯 外交政策의 基本目標

역사적으로 전개된 소련 외교정책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理論에 바탕을 두면서도 그 國家로서의 複合的인 性格때문에 複雜한 樣相을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소련의 政策決定過程이 制度的인 側面보다도 指導者 個人爲主로 政策方向이 決定되는 境遇가 많아 지도자의 교체에 따라서 外交政策의 形態가 變하게 된다. 하지만 소련이 社會主義諸國을 이끌어 가는 國家로서 마르크스·레닌주의적 理念을 벗어날

수 없고 또한 國際社會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自國의 利益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蘇聯政府가 對外政策을 推進함에 있어 政策의 背景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적 理念인 ‘革命的 目的追求’와 自國利益을 우선시하는 ‘現實適應的 目標追求’라는 側面이 내포되어 있었다.<sup>41)</sup> 傳統的으로 소련공산주의는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태하에 놓여 있는 지역을 선택하여 革命的 膨脹目標를 實現하려 하였다.<sup>42)</sup> 이러한 경향은 한국전쟁이나 그 후 소련의 對北韓 武力支持政策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련도 國際社會에서 自國의 利益을 도외시하는 政策을 推進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國際政治의 變化動因에 적응하여 自國의 得失을 우선하려는 現實適應主義的인 경향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것을 國際政治目的이라 일컫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對外政策을 보면 소련이 어느 한 目標를 一方的으로 追求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그때 그때의 주어진 與件에 따라 適用上의 比重을 달리하고 있다고 봄이 妥當할 것이다.

#### 나. 蘇聯 外交政策 路線의 決定要因

소련의 對韓半島政策을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소련 외교정책의 결정요인을 크게 여섯가지 變數로 나눠 본다.

41) 李命植, “소련의 남북한 정책과 한국의 대안,” 崔鍾起 編著, 한국외교정책론 (서울:한국국제관계연구소, 1988), pp. 120~121.

42) Jan F.Triska and David O.Finley, *Soviet Foreign Policy*(New York:Macmillian, 1968), pp. 254-256.

첫째는 個人的 變數로서 政策決定者의 特性 즉, 소련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少數權力者들의 個性 및 對韓半島 認識 등이 外交政策에 미치는 影響을 말한다. 본래 소련의 대외정책결정과정에서 制度的인 側面은 形式的인 것에 불과하고 근본적으로는 지도자 개인위주로 政策方向이 결정되어졌기 때문에 지도자의 理念的 確信, 性格, 判斷力, 다른 分派들과의 경쟁관계, 기타 政治社會的 壓力에 대응하는 태도 등이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 수 없다.<sup>43)</sup> 고르바초프대통령의 新思考(New Thinking) 外交政策에서 볼 수 있듯이 소련 외교정책에서 개인적 변수는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

둘째는 政府的 變數로서 소련의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機構들의 構造 및 役割 등이 政策決定에 미치는 影響을 의미한다. 현재 外交政策擔當機構라 할 수 있는 最高會議(The Supreme Soviet), 最高會議幹部會議(Presidium), 閣僚會議(The Council of ministers), 大統領委員會(Presidential Council) 그리고 外務省등이 外交政策에 미치는 影響 정도를 말한다. 특히 28차 당대회 후 권력이 당정치국에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이끄는 대통령위원회와 정부로 이전됐기 때문에 과거 政治局의 외교정책에 대한 影響력은 많이 약화됐다.

셋째는 經濟的 變數로서 소련의 國內經濟的 特性을 나타내며 이는 시대에 따른 産業技術 發展程度, 經濟的 與件, 經濟成長率, 經濟的 協力の 必要性등을 包含한다. 또한 이는 현재 소련이 외교정책을

---

43) 韓明華, “소련외교정책의 이념과 행동,” 金學俊編, 현대소련의 해부 (서울: 한길사, 1983), p. 181.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

넷째는 社會的 變數로서 外交政策에 영향을 미치는 非政治的 樣相 즉 소련내의 여론, 소련국민의 對韓認識의 變化, 利益團體의 影響등을 말한다.

다섯째는 理念的 變數로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世界革命理念이 外交政策에 미치는 影響力 정도를 말한다. 동서간의 新데탕트로 이 변수의 영향력은 약화됐다.

여섯째로 體制的 變數로서 외교정책결정에 영향을 주는 外部의 行爲 및 外部環境을 뜻한다. 즉 地理的·戰略的 位置, 國際體制的 特性, 周邊國의 國力, 國際體制에서의 周邊強大國의 태도 및 關係등을 말한다. 특히 소련의 한반도정책에서 중요한 體制的 變數로서 對美關係, 對中國關係, 對日本關係가 중요하게 취급된다.<sup>44)</sup>

이상과 같은 要因들은 시기에 따라 그 정도를 달리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쳐왔다.

## 2. 蘇聯의 對아시아政策 變更要因

고르바초프가 블라디보스톡연설에서 강조하였듯이 소련은 분명히 아시아·太平洋國家이다. 소련이 아시아·太平洋國家라는 점을 強調하는 것이 비단 最近의 새로운 주장은 아니나, 고르바초프 執權이후 최근 소련이 적극적인 아시아정책을 표방하고 지역국가들과의 새로운

44) 吳附妹, “소련의외교정책에서 결정요인의 상관관계: 대한반도정책을 중심으로,” 外務部 外交安保研究院, 1988년 외교관 기본과정논문집.

관계정립과 소련의 役割增大를 摸索하고 있어 주목되어지는 것이다.

소련은 과거 아시아·太平洋國家임에도 불구하고 制限的이고 消極的인 아시아政策을 推進하여 왔다. 소련은 같은 社會主義國家이면서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선을 공유한 中國과 1989년까지 계속해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심지어 韓·美·日·中의 反蘇 4角協力體制가 형성되는 위험에도 직면했었다. 또한 北韓의 冒險的인 軍事主義와 中·蘇 對立構造속에서 소련의 國益을 效果的으로 증진시킬 외교정책을 추진하지도 못했다.

소련의 그러한 소극성은 美國이 아시아지역에서 강력한 정책을 견지하고 소련에 의한 現狀變更을 결코 容認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적대적인 中國과 모험주의적인 北韓에 대한 선부른 정책이 야기시킬지도 모를 위험을 고려하여, 되도록 모험을 피하려는 現狀維持政策을 추구해온 때문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소련의 아시아政策이 소극적이고 변화에 민감하지 못했던 최대의 이유는 소련에 있어서 아시아의 비중이 낮았기 때문이다.<sup>45)</sup> 이는 소련이 전후 유럽에서 東歐共產化를 強行하고 美國과 NATO 국가들을 상대로 활발한 외교전략을 구사하여 마침내 1975년 헬싱키安保會議을 成立시켰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대조적이라 하겠다.<sup>46)</sup>

고르바초프의 新아시아政策구상은 블라디보스톡연설에서 나타나듯이 中國 및 日本과의 관계개선을 중심으로 美國의 蘇聯封鎖를 沮止하고

45) 辛承權, “소련의 대한 정책변화와 한·소관계에의 영향요인,” 統一問題研究 棼호(서울:국토통일원, 1989), p. 284.

46) 辛承權, 上揭文, p. 284.

나아가서 아시아地域의 非核化와 소련의 역할증대를 겨냥한 아시아安保會議 개최로 요약될 수 있다. 이 정책구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中國·北韓·日本 및 韓國과의 새로운 관계정립이다.

고르바초프는 블라디보스톡연설에서 “아시아·太平洋지역내의 모든 국가와의 상호관계에 있어 다양성 있는 관계를 추구할 것이며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日本에 대해 日本이 “經濟外交”라는 다양한 관계수립 수단을 갖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日·蘇間의 協力增進을 촉구하였다. 동시에 아시아 會員國들과 南太平洋 國家들에 대한 접근을 적극화하고 있다. 아시아·太平洋地域에 대한 진출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내적으로 對外貿易機構를 정비하는 등 경제협력의 여건을 조성하고, 國際通貨基金(IMF)과 世界銀行(IBRD), 그리고 특히 아시아·太平洋地域을 겨냥하여 아시아開發銀行(ADB)과 太平洋經濟協力會議(PECC) 등의 加入을 推進하고 있다. 소련은 86년 제5차 PECC會議(캐나다 밴쿠버)와 88년 제6차 PECC會議(일본 동경)에 옵저버 자격으로 참가하였으며 87년 4월에는 ADB 연례회의에 옵저버로 참가하였다. 그리고 88년 9월16일에는 크라스노야르스크연설에서 中·蘇관계정상화를 재촉하면서 中·蘇頂上會談 개최를 강조하는 등 적극적인 對아시아·太平洋政策을 具體化하였다.

고르바초프의 새로운 아시아政策構想은 오늘날 蘇聯이 안고 있는 國內의 政治經濟的 문제점과 周邊 國際情勢에 대한 새로운 認識에서 출발한 것이다. 아시아에 대해 現狀維持에 의한 安定을 바라며, 소

극적 태도를 유지해 온 소련이 고르바초프 등장 이래 그 정책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가. 對內的 變更要因

고르바초프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構造的 모순에서 비롯된 심각한 經濟沈滯를 어떻게 克服·發展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르바초프는 침체된 경제를 개선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고 있다<sup>47)</sup>

소련경제체제의 가장 큰 缺點은 고르바초프 스스로 지적하고 있듯이 무엇보다 자기발전을 위한 내적 자극이 缺如되어 있다는 점이다.<sup>48)</sup> 소련경제에 革新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려는 것이 곧 경제부문에서의 페레스트로이카이며 그것은 또한 國家所有制度和 個個人的 利害를 서로 調和시킬 수 있는 效果的인 社會主義 所有形態를 찾아 내려는 것이다.<sup>49)</sup> 그러므로 페레스트로이카는 소련사회의 下部構造에 대한 再編을 目標로 하고 있으며 모든 분야에서의 根本的인 變化를 의미한다. 페레스트로이카는 오늘날 소련이 성취해야 할 최상의 과제인 것이다.

소련이 경제발전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對外的 安定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바르드나제外相은 85년 7월 헬싱키회담에서 “어떤

47) 고르바초프인터뷰, *Time*, Sept. 9, 1985.

48) Mikhail Gorbachev, *Perestroika: New Thinking for Our Country and the World* (New York:Harper & Row, Publishers, 1987), P. 85.

49) M. Gorbachev, op. cit., pp. 83~84.

국가의 경우에도 外交政策은 國內問題와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며 國內經濟의 活性化를 위해 소련은 持續的인 平和를 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르바초프는 제27차 당대회에서 “사회, 경제적 발전을 위한 과제는 소련공산당의 國際戰略을 決定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소련이 국내 경제발전을 위해 對外的 安定基盤을 摸索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즉 국내경제적 필요가 소련의 외교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련의 아시아정책 변화는 소련경제 전반의 요청과 함께 소련의 아시아지역 즉, 시베리아·극동경제의 발전필요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 나. 對外的 變更要因

소련의 아시아 정책변화는 外交政策上的 새로운 認識變化에 기인한다. 그것은 첫째 軍事力中心의 膨脹政策이 실질적인 정치적 영향력 확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오히려 反蘇軍事協力を 조장시키고 소련을 정치,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군사적으로는 1등국가이나 경제적으로는 3등국가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늘날 고르바초프가 유산받은 최고의 딜레마인 것이다.<sup>50)</sup> 經濟와 軍事와의 相關關係에 있어 과거 후르시초프와 브레즈네프는 軍事力과 經濟力 가운데 어느 하나에 역점을 두는 양자택일의 전략을 추구하였으나 고르바초프는 경제면과 군사면을 함께 발전시키겠다는 양면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막대한 군사비가 경제전반을 압박

50) 이에 관해서는 Seweryn Bialer, *The Soviet Paradox: External Expansion, Internal Decline* (New York: Alfred A. Knopf, 1986) 참조.



하여 경제성장을鈍化시키고 있다는認識과 함께, 綜合電子頭腦武器의 時代에는 경제전반이 발전되지 않는 한 現代武器를 維持할 수 없다는 認識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것이 곧 모라토리움(moratorium) 戰略인 것이다.<sup>51)</sup>

물론 고르바초프가 군사면을 등한시하면서 경제발전에만 주력하는 것은 아니다. SDI 등 미래의 무기개발을 위해서는 기술수준도 부족하고 방대한 개발비용을 필요로 할 것이므로 軍備增強을 일시 留保하고 그동안 서방측과의 긴장완화를 통해 尖端技術을 導入한다는 것이다.

둘째, 아시아·太平洋地域에 관해 소련이 새로운 認識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소련은 종래 太平洋협력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미국과 일본이 太平洋協力會議(PECC) 등 地域經濟機構를 조직하여 각기 政治·경제·軍事的으로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도모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 지역이 美·日의 世界戰略을 위한 軍事·經濟的 블럭화할 가능성을 강조, 비판해 왔다.

그러나 太平洋協力에 대한 소련의 이러한 부정적 태도는 고르바초프 執權이후 급격한 변화를 보여왔다. 고르바초프는 블라디보스톡 연설에서 PECC에 참여할 용의를 밝혔으며, 최근 이 문제에 관하여 소련학자도 PECC가 장차 分配機能을 수행하여 선진국으로부터 技術, 商業戰略, 開發資源등을 迅速하게 이전받을 수 있는 機構로 발

51) 寺谷弘任, “連の對外戰略の變化とゴルベチヨフ政權,” 新防衛論集 第15卷 第1號 (1987. 6), pp. 1-13, 辛承權, 前掲書, p. 289에서 再引用.

전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sup>52)</sup> 그리고 소련이 현재 相異한 政治·經濟體制와의 協力을 可能하게 하는 充分한 措置들을 취하고 있으므로 PECC의 社會主義 배제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sup>53)</sup> 이에 따라 소련은 실제로 1986년 11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된 제5차 PECC總會에 옵저버 자격으로 참가하였다.

소련은 아시아·太平洋地域에서 美國과 日本이 지속적으로 帝國主義的 음모를 劃策하고 있다고 비난하였으면서도<sup>54)</sup> PECC에 대해 적극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장차 이 지역의 경제번영에 소련이 소외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인식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소련정부는 1986년 4월 23일 “아시아·太平洋地域 國家의 共同協力에 관한 소련정부의 입장 (이른바 Pacific Document)”을 발표하고, 太平洋地域의 “平和的 地域別 協助에 적극 참여하여 소련이 갖고 있는 경제 및 과학적 잠재력을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 3. 蘇聯의 對韓半島政策

#### 가. 蘇聯의 對韓半島 基本關心

소련의 對韓半島政策은 新아시아政策의 일환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52) A. Bogomolov, “Evolution of Pacific Cooperation Ideas,” *Far Eastern Affairs* No.1, 1987. p. 60.

53) M. Kapitsa, “Problems of Peace and Security in the Far East,” *Ibid.* No. 6, 1989, p. 5.

54) 예컨대, Viktor Kransnov, “US Military Buildup in the Asia Pacific Region,” *International Affairs*, May 1987.

新아시아政策 構想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다.

소련의 新아시아政策의 기본노선은, 傳統的인 南進政策 및 平和共存政策에 입각한 아시아 諸國과의 關係改善政策과 강대국간의 關係調整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집약될 수 있다.<sup>55)</sup>

역사적으로 소련의 한반도에 대한 근본적인 관심은 한반도의 地政學的 位置에 따른 전략적인 것으로, 한반도가 소련의 변경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sup>56)</sup> 비록 소련의 외교정책에 있어서 日本보다는 그 중요도가 낮다고 하나 地政學的으로 한반도는 東北亞의 縱深防禦를 가능케 하고 대륙과 바다를 잇는 橋梁的 役割을 하며, 海洋勢力과 大陸勢力의 接合點을 이루고 있어 중요한 위치에 있어<sup>57)</sup> 美·日·蘇 勢力이 서로 接하고 있는 한반도에 대해 큰 戰略的 價値를 부여하고 있으며 한반도가 갖는 특수한 地政學的인 見地에서 帝政러시아시대나 지금이나 소련의 안보와 직결되는 軍事戰略上의 要衝地로 看做되고 있다. 즉, 소련의 對韓半島 政策은 事戰略上의 重要성에서 韓半島를 極東의 前哨地나 安保上의 완충지대로 維持함으로써 對西方 견제는 물론 對아시아 진출을 위한 橋梁으로 利用하려는 政策이다.<sup>58)</sup>

55) 李命植, “소련의 남·북한정책과 한국의 대안”, 崔鍾起編著, 한국 외교정책론 (서울:한국국제관계연구소, 1988), pp. 122~123.

56) Ralph N.Clough, “두개의 한국과 소련,” Donald S.Zagoria, “소련의 대아시아정책” (서울: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1984), p.209.

57) 金燦圭,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 國際問題(서울:국제문제연구소, 1985. 10), p. 11.

58) 李命植, “소련의 대한반도정책이 미치는 영향” 新東亞 (서울:東亞日報社, 1973, 2), p. 107.

## 나. 80년대 고르바초프의 對韓半島政策 推移

1985년 3월 고르바초프가 蘇聯共產黨書記長으로 취임하면서 소련의 외교정책은 큰 변화를 보였다. 經濟再建을 뜻하는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와 情報公開을 의미하는 글라스노스찌(Glasnost), 새로운 世界觀을 內容으로 하는 노보예 므이슬레니예(Novoye Myshleniye)등을 표방하고 등장했던 고르바초프는 지난 30년간 지속되어온 對西方爲主의 外交政策에서 탈피, 外交路線의 多元化를 강조했으며 특히 그동안 等閑視되어온 아시아·太平洋地域에 주목할 만한 관심을 보여왔다. 고르바초프의 아시아 政策은 中國 및 日本과의 關係改善과 韓半島問題의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理解된다.<sup>59)</sup>

먼저 고르바초프의 한반도문제 해결의지는 對北韓關係改善으로 나타났다. 1984년 5월 金日成이 소련을 방문한 이래 소련과 북한사이에는 대규모 왕래가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양국관계는 각 분야에 걸쳐서 현저하게 긴밀화되었다. 同年 11월에는 아시아 담당 副外相 카피차가 北韓을 방문하여 朝·蘇國境에 관한 條約의 締結<sup>60)</sup>과 경제 및 군사협력 문제를 논의했으며 이후 양국간에는 고위수준의 인적교류가 증가되고 북한에 대한 경제·기술 및 武器提供이 구체화되었다. 1986년 10월에는 양국 공군의 합동 작전외에도 소련·북한 합동해군훈련까지 東海上에서 실시됨으로써 양국간에는 적극적인 군사협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sup>61)</sup>

59) 韓國日報, “고르바초프 外交, 韓半島 本格布石,” 1989. 3. 11.

60) 東亞日報, 1986. 10. 21.

61) 東亞日報, 1988. 10. 17.

이상과 같은 대북한관계 긴밀화로 戰略的 基地確保라는 첫단계 정책을 매듭지은 소련은 한반도에 대한 제2단계적 조치로 보여지는 對韓國接近을 시도하였다. 1988년의 서울올림픽은 소련의 의도에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소련은 領事團의 서울 駐在, 대규모의 선수단 파견, 文化올림픽에의 적극 참가등으로 한국에 대하여 '轉換期的 事變'이라고 評價될 만한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취하였다. 또한 同年 10月에는 한국과 貿易事務所 相互開設과 經濟協力에 관한 合意事項을 골자로 하는 備忘錄을 교환하여 韓·蘇關係의 새로운 里程標를 세웠다. 이에 의거 1989년 4월 서울과 모스크바에 貿易事務所를 相互 設置하고 이어서 8개월 뒤인 12월 8일 양국의 수도에 領事機能을 遂行하는 領事處를 相互交換 開發하기로 하는 등 양국관계는 급진전되었다.

이렇게 되자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韓·蘇間의 交易規模가 1989년에는 6억 달러에 이르게 되었다.<sup>62)</sup> 이러한 일련의 추세를 볼 때 소련은 한반도를 과거에는 地政學的 側面에서 보아 왔으나 최근에는 한국의 社會·經濟發展을 認定하고 경제발전의 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베리아개발에 한국의 資本과 技術을 利用하려 하고 있다.

#### 다. 對韓半島政策 變化의 內容과 背景

##### (1) 決定要因에 따른 變化의 內容

決定要因에 따른 對韓半島政策의 變化를 살펴봄으로써 소련의 政

62) 東亞日報, "門여는 韓·蘇시대," 1990. 6. 3.

策決定過程을 조명하고 韓國이 추구하는 對北方政策의 方向設定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個人的 變數：蘇聯指導者の 役割

소련의 對韓半島政策은 당시의 指導者の 특성에 따라서 큰 變化를 보여왔다.

1950년대부터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대한반도정책의 기초가 한반도의 共產基地化政策에서 平和共存을 통한 現狀維持政策으로 변화였고 70년대에 유즈나야 코레야(Yuzhnoi Koreya) 政策 즉 Two Korea 政策으로 변하여 80년대에 남북한 동시접근을 통한 現狀維持政策으로 바뀌었다. 소련의 지도자가 스탈린, 후르시초프, 브레즈네프, 고르바초프로 변화된 것과 대한반도정책변화가 시기적으로 일치하는 점을 볼 때 대외정책결정에 소련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 더우기 마르크스·레닌主義란 革命理念下에서도 소련의 외교정책이 후르시초프의 平和共存政策이나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政策으로처럼 융통성있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소련의 외교정책에서 지도자의 비중을 추측할 수 있다.

최근 經濟再建, 情報公開, 新思考등을 표방한 고르바초프가 등장함으로써 한국과 경제적인 교류가 활발하게 되었는데 이를 볼 때 韓國과 蘇聯關係에서도 指導者란 個人變數가 큰 역할을 한다고 보여진다.

－ 政府的 變數

蘇聯邦의 國家機關中에서 구체적으로 지도자에게 影響을 미칠 수

있는 것은 閣僚會議(Council of Ministers), 最高會議(the Supreme Soviet), 最高會議幹部會(Presidium)<sup>63)</sup> 및 大統領委員會(Predidential Council) 등이 있다.

法的으로는 外交政策의 최고기관이 蘇聯最高會議로 규정되어 있으나, 최고회의는 외교정책결정기관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정책에 대한 확인기관, 정책을 선전하는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閣僚會議나 幹部會議는 외교정책의 執行責任을 맡고 있고 外務省이 外交政策의 日日課業을 관장하고 있다. 과거에는 정부가 소련공산당의 정치국에 종속되어, 당의 중요인사에 의해서 외교정책이 占有되어있는 형편이었으나 대통령제 도입과 제28차 당대회이후 黨·政이 분리됨으로써 외교정책의 결정권은 대폭 정부와 대통령으로 이양됐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자신 및 정부내의 엘리트 분포가 당연히 소련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韓半島政策에도 영향을 준다. 현재 소련정부내에는 다양한 국제교류를 추진하려는 國際主義者나 西歐, 日本, 韓國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온건개혁파가 다수를 차지함으로써 對韓半島政策이 달라진 것이다.

#### — 理念的 變數

社會主義國家를 이끌어 가는 소련에서 마르크스-레닌主義의 革命理念이 陰으로나 陽으로 소련외교의 根幹이 되었음은 틀림이 없다.

이에 대해 아스파투리안교수는 外交政策에서 理念體系가 行動戰略을 제공하고 政策의 연속성과 정통성의 象徴으로서 중요하게 기능한다고

63) 崔鍾起, 소련외교정책론 (서울:法文社, 1987), pp. 196~197.

서술하였다.<sup>64)</sup>

역사적으로 볼 때 蘇聯은 對韓半島政策에서 시기에 따라 理念과 國家利益의 比重을 달리해 왔다. 즉 한반도정책이 衛星國家化 政策에서 平和共存政策으로, 다시 Two Korea 政策 즉 現狀維持政策으로 變할 수 있었던 것도 理念追求 정도의 변화와 많은 연관성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소련이 自國의 利益을 추구하여 理念의 重要도가 낮아질 때에는 對北韓關係가 疏遠해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련의 이념추구와 북한과의 관계가 반드시 一律的이라고 할 수는 없다. 국제사회가 다변화되면서 북한과의 관계는 오히려 소련 일방의 이념추구 정도보다는 소련의 理念追求路線과 北韓의 理念路線이 어느정도 일치 할 때 밀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당시 소련의 支配理念이 다소간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념추구보다는 당시 指導者의 對韓半島政策 意圖가 절대적인 影響을 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후르시초프가 平和共存路線을 제창하여 미국과의 대화가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보거나, 현재 한국과의 경제교류도 고르바초프의 新思考 外交路線과 페레스트로이카政策 및 블라디보스톡宣言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 體制變數: 國際環境的 要因

역사적으로 소련외교가 중점을 두어 온 것이 먼저 對社會主義圈에

---

64) Vernon V. Aspaturian, *Process and Power in Soviet Foreign Policy* (Boston: Little Brown & Co., 1971), p. 337.



대한 外交이고, 그 다음이 對發展途上國外交, 對資本主義國家外交였다.

65) 특히 社會主義國家들을 이끌어가야 하는 位置에 있으므로 美國, 日本, 中國등의 政策變化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戰略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한반도에 北韓이라는 社會主義國家가 자리잡고 있는 한, 소련의 대한반도정책은 국제정치체제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한반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對美, 對中, 對日關係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왔다.

— 社會的 變數<sup>66)</sup>

소련에서 大衆이 外交問題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서 大衆集會나 데모에 참가하는 것과 매스컴에 投書하는 방법이 있지만 실제 일반대중이 국제문제를 알기 어렵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國內問題에 대한 의사표시도 궁극적으로는 指導者에게 영향을 주어 對外政策에 反映하게끔 할 수 있으므로 對外政策과 전혀 관계없다고는 할 수 없다. 고르바초프의 집권후 소련내부에서 일어난 民族紛糾<sup>67)</sup> 國民의 經濟的인 慾求噴出이 間接的으로 執權層에 영향을 주어 經濟再建政策을 택하게 되었고 결국 이러한 經濟的 必要下에 韓國과 接觸을 시도하게끔 되었던 것이다.

65) 崔鍾起, 前揭書, p. 181.

66) Robert D. Grey, Lauri A. Jennisch, and Alannas Tyler, "Soviet Public Opinion and the Gorbachev Reforms," *Slavic Review* Vol.49 No.2(Stanford: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lavic Studies, 1990), pp. 261~271 참조.

67) R. Misiunas and R. Taagepera, *The Baltic States: the years of dependence, 1940-80*(London: Hurst, 1983) 참조.

매스컴의 경우 소련의 新聞·雜誌·放送 등 거의 모든 매스컴기관이 黨 혹은 政府나 社會團體의 機關紙여서 黨의 政策을 排除하기가 힘들었다. 따라서 소련의 매스컴은 한반도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방적으로 北韓을 지지하고 韓國을 非判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黨機關紙인 프라우다(Pravda) 나 政府機關紙인 이즈베스차(Isvestia), 그외의 잡지(Far Eastern Affairs 등)의 內容을 보면 종래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국경제에 대해 비교적 客觀的 評價를 하려는 흔적을 발견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한국의 경제발전을 인정하고 양국간 公式關係樹立을 지지하고 촉구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 — 經濟的 變數

소련의 對外政策에 있어 經濟的 必要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당연하나 時期의 變化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어왔다. 80년대 초반까지는 蘇聯의 對韓半島政策에서 경제적 중요성보다 戰略的 重要性이 큰 작용을 해왔으나 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國內改革의 필요성에 따라 경제적 측면이 더욱 중시됐다.

한국과의 적극적 접촉이라는 정책결정의 배경에는 소련이 처해있는 경제적 상황이 전제되어 있다.<sup>68)</sup> 소련은 1970년대 후반에 노동력 부족현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주로 剩餘勞動力 投入에 依存한 손쉬운 經濟成長을 해왔다. 그러나 勞動力不足이 構造化된 1980년대에 들어

68) Morris Bernstein(ed.), *The Soviet Economy: Continuity and Change*(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1981) 참조.

와서는 生産性提高에 依存한 經濟成長을 하는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理由로 경제성장률은 年平均 2~3%로 떨어졌으며, 비록 1985년 고르바초프 집권후 경제성장률이 4% 가까이 회복되었으나 소련경제는 노동력 부족에 따른 생산성 저하라는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sup>69)</sup> 또한 1천6백억달러 (1988년)에 달한 財政赤字를 줄이기 위해 그 방향을 모색하는 중, 고르바초프는 서방과의 경제협력과 시베리아 개발에 중점을 두고 太平洋經濟圈과의 本格的 연계를 추진하였다. 결국 소련은 세계 10위의 貿易大國으로 성장하면서 資本과 技術을 축적해 온 한국에 관심을 두고 자국의 경제발전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韓·蘇間의 1989년 4월 貿易事務所 設置 및 12월 領事處 相互開設, 1990년 10월 1일 수교합의 공동코뮤니케셔명도 이러한 經濟的 實利인식에서 기인된 것이었다. 이와같은 사정으로 미루어 소련내의 경제적인 요인들은 향후 한국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변수로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소련의 대한반도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相關關係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련의 대한반도정책의 기본목표는 시기에 따라 변화여 왔음을 알 수 있는데, 점차로 革命目標追求보다는 自國의 戰略的·經濟的 利益追求의 方向으로 바뀌었다. 戰略的으로는 北韓과, 經濟的으로는 韓國과 接近함으로써 兩國의 存在를 認定하고 現在의 狀態를 유

69) 太平洋産業研究院, 소련의 개혁정책 추진과 동·서양진영의 정치, 경제, 외교적 역학관계연구(서울:太平洋産業研究院, 1989), p. 256.

지하려는 Two Korea Policy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소련의 對北韓政策과 對韓國政策이 각기 다른 관심과 次元에서 어느정도 獨立的으로 推進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둘째, 소련의 대한반도정책 결정과정에서는 소련지도자의 역할 즉 개인적 변수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왔고 소련의 국제적인 위치상, 體制變數 즉 주변강대국의 태도나 국제환경변화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최근에 와서 社會的 變數도 소련의 대외정책에 조금씩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 아직까지 미미한 정도이다. 한편 經濟的 變數와 理想的 變數는 南北에 있어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해왔다. 즉 北韓에게는 理想的 變數가, 南韓에게는 經濟的 變數가 주된 작용을 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의 소련 대외정책에서 理想的 變數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自國의 實利追求라는 經濟的 變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은 우리의 對蘇政策에 많은 시사점을 提供해 준다.

이상에서 보듯이 蘇聯의 對韓半島政策에서는 蘇聯指導者의 特性 즉 個人變數가 절대적 역할을 하며, 體制變數와 최근에는 經濟的 變數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最近 急激한 經濟改革<sup>70)</sup>을 표방하고 있는 고르바초프가 소련지도자로 등장했다는 사실은 한국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이를 배경으로 한국은 주요변수인 體制變數 즉 주변강대국간의 관계를 적극 활용하고

70) 鄭漢求, “소련경제개혁의 현황과 문제점,” 蘇聯研究 3월호(서울:韓蘇問題研究所, 1990), pp. 34~37. 참조.

經濟的 側面에서의 接觸을 強化함으로써 소련과의 국교수립<sup>71)</sup>이라는 목표를 달성해 냈다.

위에서 지적한 視角을 통해 소련의 對韓接近要因을 크게 두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아시아·太平洋時代의 到來를 예감한 소련이 이 지역에서의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미국에 비해 상대적 열세에 처해있던 對아시아 主導權을 획득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의도하에 소련이 냉전의 표상으로 되어있던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를 위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중심국가인 韓國에 대해 宥和政策을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이는 곧 그동안 對北韓 侵略防止用이 아니라 蘇聯領土 攻擊目的이라고 그 配置目的을 의심해 왔던 駐韓美軍과 核의 撤收를 통하여 南韓을 韓·美·日로 이어지는 삼각 軍事同盟本制에서 풀어내려는 것이다.

둘째, 또다른 分析은, 蘇聯의 對韓國接近이 그 政治的 目的보다도 당면한 蘇聯의 對內經濟沈滯를 脫皮해 보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본다.

즉 지지부진한 페레스트로이카推進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要素를 韓國經濟의 成長모델에서 찾고자 한다고 보는 것이다. 소련의 極東地域開發에 소극적인 日本을 자극하면서도 經濟急成長의 비결

71) 1990년 9월 30일 낮12시(하루시간 10월 1일 상오시) 美뉴욕 유엔본부내 안보리 의장실에서 史上 첫 양국외무장관회담을 갖고 양국수교에 합의하는 공동코뮤니케에 서명했다.

을 전수해 줄 수 있고 게다가 당장 필요한 物資와 資本을 어느 정도나마 마련해 줄 수 있는 상대로서 서울올림픽 이후 한국이 급속히 부각되었다는 것이다. 주로 經濟的인 目的에서 韓·蘇接近을 보는 이러한 시각은 양국 交易額이 1989년 6억불로 늘어났다는 사실로서 그 妥當性을 立證하고 있다.

## (2) 最近 變化 및 그 背景

최근 남한의 대표적인 재벌들이 소련 시베리아·극동개발의 중요한 파트너로 부각되고 있고 한편으로 한·소무역의 중요한 형태가 소련 원자재와 한국 공산품의 교환형태로 이루어 질 경우 소련경제의 기술종속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는 소련내 종속이론가들이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반면에 냉전시대 전통적 동맹관계였던 朝(북한)·蘇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소련의 개혁과 언론들의 북한 체제 비판의 소리가 점점 높아져 최근, 개혁파 신문인 「모스코프스키 콤포몰레츠」는 북한체제의 문제점을 들어 북한과의 단교 및 석유공급 중단까지 요구하고 나섰다.<sup>72)</sup> 1950년대 ‘반중파투쟁’ 전개과정에서 반김일성 운동에 참여했던 在蘇韓人 亡命客들이 한국전쟁 40주년을 계기로 속속 입국해서 반북한·반김일성 발언과 한국사회 칭송에 여념이 없으나 소련은 그들의 우방(북한)의 불편한 심기에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소련에게 이제 북한은 모순투성이의 문제있는 사회주의 국가로 인

72) 동아일보, 1990. 6. 29.

식되고 있는 반면에 바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반식민지정도로 인식되었던 한국은 '아시아·太平洋地域에서 경제력있고 나름대로 정치적 비중도 있는 강력한 주권국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소련의 남북한 사회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독자적인 행보는 '새로운 정치적 사고'<sup>73)</sup> 라는 새로운 국제관계 인식틀에 기초하고 있다. 새로운 정치적 사고는 현대를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의 이행기로 바라보나 그 이행이 장기적이며 평화적이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새로운 정치적 思考'는 그런 意味에서 돋보인다.

과거 소련은 국제관계를 인식함에 있어 세계가 "전혀 다른 두 개의 정치체도로 나뉘어져 대결을 벌이고 있으며 사회주의의 정치·군사적 지위 향상과 자본주의의 약화를 통해서만 지역문제의 해결이 가능" 하다고 본 적이 있다.

"新思考"는 이를 낡은 것으로 비판하면서, 인류공멸의 핵전쟁의 위협에 직면한 세계에게 오늘날 필요한 것은 계급적 가치보다 공동의 이해가 걸려있는 전인류적 보편적 가치라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핵시대의 위협에 직면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세계는 부득이 상호대립적인 측면보다 상호의존적 측면을 더 중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새로운 정치적 사고는 국제관계에서 脫이데올로기를 강조하며 '계급적 이해'를 떨쳐 버릴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73) 金裕南, 前掲書, pp. 69~70. 참조

관점에 입각해서 소련의 개혁파들은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전의 보장, 갈등방지를 朝·蘇關係의 발전보다 높게 평가하며 韓·蘇關係의 진전을 지역상황의 정상화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개혁파들은 냉전구조가 아직 해체되지 않은 동북아시아에서 이 지역국가들간의 안정적이고 활발한 정치·경제·문화적 協力體의 構成<sup>74)</sup>을 목표로 하는 아시아판 헬싱키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가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정치적 사고는 ‘中進資本主義論的 觀點’이라는 소련개혁파의 제3세계 발전관과 결합되어 한반도 문제에 관한 여러 측면의 정책들을 고안해 내게 한다. 중진자본주의는 주변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변부 국가들 사이의 중심부보다 훨씬 심한 불균등성에 주목하여 E. 프리마코프등이 주장한 것으로, 주변부의 상층국가들이 ‘중진 수준의 발전’을 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이들 중진 국가들에 있어서 ‘종속’은 불변의 구조를 가진 숙명적인 범주가 아니라 점차 변화될 수 있는 상대적인 범주로 파악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일방적 종속이 비대칭적 상호의존으로 나아가고 다시 정상적인 상호의존(현재의 ‘중진자본주의’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韓國등 신흥공업국가들의 선진자본주의로의 자주적 발전이 가능하다는 논리이다.<sup>75)</sup>

74) 김성훈, “동북아 경제협력권 구상과 한국의 대응,” 국제정세 8월호(서울: 국제학술원, 1990), pp. 152~163. 참조.

75) 이종석, “한반도를 보는 소련의 눈이 달라지고 있다,” 사회와 사상 8월호(서울:한길사, 1990), p. 184.



중진자본주의를 보편적 범주로까지 확대시키고자 하는 일부 급진개혁파들은 아예 식민지·반식민지상태를 벗어난 신생국들의 발전전략으로 사회주의의 길은 맞지 않으며 오히려 자본주의가 더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소련 과학아카데미 동양학연구소의 A. 키바와 같은 학자는 가나·말리·미얀마·이디오피아·남예멘 등 신생사회주의 지향국가들의 고난과 파산을 예시하면서 “남한·싱가포르·말레이시아 기타 국가들은 지금 우리의 목전에서 과학적이고 기술공학적인 생산력 창조에 문턱에 와 있다.”<sup>76)</sup> 고 자본주의로의 길을 찬양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제3세계 진보세력에게 “자본주의적 발전에 민주적 요소를 부여하고 막강한 자본주의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대신에 반동적인 경향이 성장하는 것을 저지” 할 것을 권고한다.<sup>77)</sup>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새로운 정치적 사고라는 국제관계 인식의 틀과 한국경제에 대한 중진자본주의적 사고가 교묘히 소련의 전통적인 현실주의 노선과 결합되어 한반도에 관철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경제에 대한 한국의 전문가들도 당황하리만치 과대한 평가와 지나친 경제적 접근, 눈에 확연히 띄는 韓·蘇 經濟關係와 朝·蘇 政治·軍事關係 사이의 저울질 등 무수한 사례등이 이를 예증하고 있다. 아마 소련 국내경제여건이 어려워질수록 이러한 대외적 명분속에 은폐된 국가이기주의의 모습은 확대재생산될 것이다.

76) 알렉세이 키바, “혁명은 계속되고 있다,” 사회와 사상 7월호(서울:한길사, 1990), p. 199.

77) 알렉세이 키바, “발전도상국가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上揭書, p. 174.

한마디로 새로운 정치적 사고<sup>78)</sup>와 한국사회에 대한 중진자본주의적 인식이 소련의 현실적인 경제적이해와 접목되어 구체적인 소련의 한반도정책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하겠다.

#### 라. 急進展되는 韓蘇關係

蘇聯의 韓國에의 接近은 安保戰略的 側面과 經濟的 側面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

##### (1) 安保戰略的 側面

이미 블라디보스톡 선언(1986), 크라스노야르스크 선언(1988) 등을 통해서 아시아·太平洋 地域의 평화체제구축 노력을 선언한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은 中·蘇關係 正常化와 極東의 軍事力 減縮등을 통해 미국의 헤게모니가 관철되어온 이 지역의 냉전구조 해체작업의 1단계 기선을 잡았다. 주지하다시피 동북아 평화체제의 확립은 곧 이 지역에서 미국의 힘의 우위를 통해 유지되어 온 냉전질서를 붕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련의 현단계 동북아 평화전략은 냉전구조의 와해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동북아 냉전구조의 중심축이 되어왔던 한반도의 대립구조 해소가 소련외교의 중요한 현안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소련은 그들이 몇 년전만 해도 미국의 '괴뢰정권'이라고 간주했던 남한정부가 내놓은 한반도문제 해결방식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1988년 노태

78) 자세한 내용은 Rajan Menon, "New Thinking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Problems of Communism* Vol. 38, No.2~3, March-June 1989, pp. 1~29. 참조.

우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의한 '동북아 6개국 평화회의' 제의<sup>79)</sup>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온 것도 소련이다.

이제 소련은 정치·군사적으로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이를 미국의 동북아시아 헤게모니 약화로 연결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 (2) 經濟的 側面

경제적인 차원에서 韓·蘇關係의 급진전은 주목할만한 것이다. 韓·蘇사이에 서로를 필요로 할 만한 유인적 요소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sup>80)</sup> 즉 소련내부의 생활필수품이나 공산품생산에 응용될 중간수준의 기술을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서 한국은 소련에게 매력적으로 비추어지고 있다. 반면에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의 보호무역 장벽에 시달리는 한국자본 역시 소련이라는 새로운 시장(새로운 원자재의 공급지역)의 확대는 확실히 매력적인 것이다.

물론 한국자본의 소련경제 참여가 소련 국내경제의 위기극복에 한 활력소로서뿐만 아니라 일본자본주의의 소련경제참여의 유인책으로도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아무튼 韓·蘇間의 순수한 무역규모가 1986년 1억 1,800만달러에서 1989년 6억 달러로 급성장했다는 사실을 볼 때 韓·蘇關係의 급진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79) 연설문 전문의 내용은 "외교" 제7, 8호(서울:한국의교협회, 1988. 12), pp. 110~124. 참조.

80) 한창수, "한·소경제협력의 새로운 단계와 전망," 민족지성 7월호(서울:민족지성, 1990) pp. 52~57. 참조.

그러나 현 단계에서 韓·蘇關係의 進展은 급격히 이루어 졌으나 몇가지 장애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소련의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 (IMEMO) Andrew교수는 韓·蘇關係의 正常化에 다음과 같은 걸림돌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sup>81)</sup>

첫째, 韓·蘇사이에 존재하는 상대방에 대한 정책목표의 우선순위들 간의 모순이 그것이다. 한국의 對蘇政策 (北方政策)은 주목적이 정치적인 측면에 맞추어져 있는 데 비해 蘇聯의 對韓政策은 경제·과학·통신등 비정치적 교류에 우선순위가 두어져 있다. 둘째, 韓·蘇兩國의 경제제도상의 차이 그리고 한·소경제관계의 보완성 감소가 예상된다. 즉 한국은 기술공학적 단계로 상승하고 있는데 소련은 침체상태로 남아있어 보완성이 감소될 것이다. 또한 소련으로부터의 한국의 원자재보충은 불공정한 무역구조를 초래할 것이며, 소련경제의 기술종속을 심화시킬 것이다. 소련경제부처에 광범하게 포진하고 있는 종속이론 지지자들이 최대의 사회주의 강국이 자본주의세계의 원료보충지로 변화되는 착상을 강력히 반대한다. 셋째, 북한태도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1990년대의 모스크바 당국은 1980년대초에 그들이 했던 만큼 평양의 반응에 매번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나 아직도 韓·蘇關係에 관한 한 北韓의 태도는 중요한 變數이다. 넷째, 韓國과 蘇聯은 각각 아직도 서로 상반된 安保體制內的 軍事的 公約에 얽매어 있다는 사실을 들수 있다. 마지막 韓·蘇接近

81) Buchin A. Andrew, "Soviet-Korean Relations: Old ambitions and opportunities," pp. 9~12(1990년 3월 하와이 대학개최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

에 대한 美國과 日本의 시기적 태도도 韓·蘇關係를 방해할 지도 모를 또 다른 요소라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예상된 걸림들에도 불구하고 韓·蘇關係는 急進展되어 國交樹立에 이르렀다.

#### 마. 韓蘇修交의 意味와 波長

소련의 亞·太進出의 가시적 결과라 할 수 있는, 韓·蘇간의 역사적인 국교정상화는 新데탕트로 요약되는 세계질서의 재편조류가 마침내 한반도를 위시한 東北亞에까지 밀려왔음을 應變으로 실증하는 것이다. 동시에 한반도의 위상을 국제무대의 전면에 부상시키고 한반도를 축으로 한 주변국가에 대해 정치·외교적 파급효과<sup>82)</sup>를 엄청나게 증폭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준 셈이다.

결국 韓·蘇수교는 양국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南北關係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주변정세, 나아가 東北亞질서의 재편을 뿌리내리는 전환점으로 인식돼야 마땅할 것 같다.

특히 東北亞秩序 재편을 향한 美·日·中等 주변강국들의 발걸음을 빠르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위치를 동북아 정세변화의 중요한 변수로 올려놓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다.

#### (1) 韓半島 주변 정세(南北關係를 중심으로)

韓蘇 양국간의 국교정상화는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평화구조를 강화

---

82) 이에 대해서는 金應, “韓蘇修交와 東北亞政治秩序,” 韓蘇修交와 東北亞 政治經濟秩序 (1990년 11월 17일 한국사회주의 체제연구협의회 개최 학술회의 발표논문 요약집), pp. 10~15. 참조.

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소련이 한국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측면도 있겠으나 북한 및 중국등을 자극함으로써 한반도 평화구조에 편입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동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韓蘇수교는 우선 북한에 대해 대외정책의 근간을 재조정토록 압력을 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최대동맹국중 하나인 소련이 한국을 국가로 인정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했다는 사실은 북한이 대외정책 및 대내통합의 기본논리로 사용해온 ‘하나의 朝鮮<sup>83)</sup>’ 명분을 뿌리채 뒤흔든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韓蘇수교는 이미 형성돼 있던 한국의 유엔가입 분위기를 확산시킴으로써 북한의 기존노선고수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對유엔정책 등에서 이미 논리적 혼란을 겪기 시작한 것으로 관측되며 일본과의 관계개선 등 외교적 자구책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은 韓·蘇修交로 촉발된 한반도 주변정세의 본격적 재편움직임에 어떤식으로든 대응할 것이 예상되며 이는 “하나의 朝鮮 → 南朝鮮解放<sup>84)</sup>”으로 이어지는 기존논리의 포기를 의미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韓蘇수교는 한반도평화의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인 중국의 태도에도 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중국은 복잡한 내부사정 및 특수성으로 인해 소련과 같은 속도의 변화를 보이기는 어려울

83) 金甲喆, “김일성 주체사상과 그것이 북한 통일정책에 미치는 영향,” 통일 연구논총 88년 8권 2호(서울:국토통일원, 1988), pp. 121~125 참조.

84) 金甲喆, 上揭文, 參照.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즉, 대만과의 관계때문에 1민족 2국가를 인정치않는 대외정책, 鄧小平 등 혁명 1세대와 북한 金日成 등과의 인간적 유대, 한반도주변 4강 중 최하의 국력으로 인한 동북아 현상유지정책 등의 제약요인은 중국이 다른 열강과 같이 빠른 행보를 보이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지난해 6·4 천안문사태이후 보수적 색채를 띠고 있는 중국의 지도층이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비슷한 노선을 견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문화혁명이 한창이던 지난 72년 미국과 관계개선을 시작했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대외정책만큼은 국가이익을 고려해 대내정책과 분리 시행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중국은 항상 미국, 소련에 이은 제3의 수퍼파워임을 자임해 왔기때문에 동북아질서재편 과정에서 지나치게 뒤처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소련과 같은 속도는 아니더라도 이번 韓蘇수교를 계기로 동북아에서의 주도권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sup>85)</sup>

韓蘇관계정상화 움직임에 맞추어 재빨리 운신의 폭을 넓힌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은 양국간 수교발표가 나기전 이미 북한과의 공식접촉을 통해 관계개선을 적극 모색하고 나섰다. 경제뿐 아니라 국제

---

85) 한영춘, “한·중관계의 현황과 발전방향,” 국제정세 8월호(서울:국제학술원, 1990), pp. 48~57. 참조.

정치에서도 강대국의 면모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일본은 이웃나라인 북한과 미수교상태인 점과 소련과 북방4개 도서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실에 외교적 수치심을 느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은 지난 6월 샌프란시스코 韓蘇정상회담이 자신들의 어깨너머로 전격 성사된 것을 몹시 당황스럽게 생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급속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며 이같은 시도는 한반도 주변정세 급변에 따라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의 對北관계개선은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선에서 韓·美·日의 공동보조아래 이뤄져야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와 미국의 공통된 시각인만큼 일본의 의사대로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韓蘇수교가 한반도 평화구조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지지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소련이 韓蘇수교를 계기로 태평양함대의 일방적 감축을 의미하는 동북아 군축이나 지역안보체제의 구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할 경우 견제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결국 미국은 동북아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현상태로 유지하면서 한반도평화를 강화하는 쪽으로 이 지역 질서재편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 (2) 經濟的 側面<sup>86)</sup>

86) 이행·김계동, “85년만에 이루어진 한·소수교”, 국제정세 11월호(서울:국제학술원, 1990), pp. 14~15. 참조.



韓蘇수교는 그동안 모색단계에 머물러 있던 양국간의 경제협력관계를 한 차원 끌어 올려 본격적으로 교역과 투자가 확대되는 經濟同半時代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韓蘇修交의 급속한 추진이 가능했던 배경이 바로 경제협력이었던 만큼 韓蘇관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진전을 보일 분야는 역시 경제라는 것이 일치된 견해이다.

그리고 수교에 따른 양국간의 활발한 경제교류는 수출부진 등으로 기력을 잃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우리 경제를 질과 양적인 면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하는 견인차구실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소비재 부족난을 겪고 있는 소련에 생필품을 중심으로 한 소비재의 수출이 급증할 것이 예상되며 이어 시베리아 등지의 풍부한 삼림, 가스, 지하자원등의 개발사업에 우리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되고 있다. 또 소련측이 제안한 21개 합작프로젝트를 비롯, 소련이 당장 필요로 하는 소비재생산을 위한 합작투자, 소련의 첨단기술과 우리의 생산기술을 접목시킨 새로운 사업의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소련이 안고 있는 여러가지 경제협력상의 문제점들,<sup>87)</sup> 즉 ① 시장경제전환에 따른 각종 법령이나 제도의 미비 ② 루블貨의 兌換性결여 ③ 외환부족에 따른 대금결제 지연 ④ 도로, 철도등 사회간접자본의 취약성 등 교류를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87) 조선일보, 1990년 10월 2일자.

각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韓蘇수교가 60년대의 베트남特需나 70년대의 中東건설붐을 능가하는 새로운 성장동파구가 될 것으로 판단, 교역에서부터 합작진출, 자원개발사업등 다방면에 걸쳐 야심에 찬 진출계획을 추진중이다.

특히 무역협정,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과학기술협정, 어업협정, 항공협정등 경제관련 6개협정들이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자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사활동을 강화하고 현지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시베리아를 '마지막 남은 프론티어'로 보고 對蘇진출에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한국 現代그룹의 경우 최근 스페틀라야지역의 삼림개발을 위한 現代자원개발을 설립, 정부의 투자승인과 장비반출까지 끝내 사업착수는 시간문제라 다가섰다.

이미 소련측과 의향서교환을 끝낸 석탄개발, 비누공장건설, 퍼스널 컴퓨터 제조공장설립 등도 내년초에는 구체적인 사업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도 現代의 야심적인 소련프로젝트로 일컬어지는 야쿠베즈및 사할린 가스개발, 20억달러에 달하는 석유화학단지 건설사업 등도 구체적인 진전이 예상되며 모스크바지역에 승용차조립공장 건설을 위해 10억달러정도를 투입하는 사업계획도 곧 가시화될 전망이다.

三星그룹은 모스크바의 스포츠호텔 개축사업을 시작으로 은밀하게 진행시켜온 사업들을 속속 구체화시킬 계획이다.

이미 三星물산, 三星종합건설, 호텔신라의 실무기술팀 20여명을 모

스크바에 파견한 삼성그룹은 곧바로 사업에 착수, 빠르면 내년부터 호텔경영에 나설 예정이며 이 밖에 기술조사까지 끝낸 부틸고무 합작생산, 피혁가공산업, 전자교환기 합작생산, VCR조립생산등의 사업도 순차적으로 진행시킬 계획이다.

삼성은 특히 기술도입계획을 체결한 소련의 라이선싱토르그社와 생명공학, 정밀화학, 의학, 우주항공등 첨단분야의 기술교류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삼성제품 판매를 위한 현지유통회사 설립도 검토중이다.

럭키金星그룹은 총3억달러가 투입될 모스크바 한국무역센터 건립사업을 비롯, 1회용 주사기 제조공장등 10여건의 투자안건을 구체화시킬 방침이다.

이밖에도 大宇그룹은 대단위 섬유봉제 합작사업과 호텔 신축사업을 곧 착수할 예정이며 高麗합섬이 현지봉제공장 건설, 進道모피가 모피의류 제조사업, 三煥기업이 목재가공사업등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또 鮮京, 雙龍, 코오롱, 韓一합섬, 和承 등도 합작사업을 모색중이다<sup>88)</sup>

국내기업들의 韓蘇수교에 대한 기대감은 워니워니해도 우리측의 對蘇차관에 집중되고 있다.

소련의 교역방식이 '인카소'(수출품 인도후 대금지급)로 되어있어 信用狀방식처럼 금융기관의 대금지급보증을 받지못해 수출대금 미회수라는 부담을 안았던 기업들은 對蘇차관이 對韓경협자금으로 사용되기때

---

88) 각 기업의 對蘇진출계획 및 현황은 한국일보, "새 韓·蘇시대", 1990년 10월 6일자.

문에 차관관련 사업에 관한 수출대금을 못받을 염려가 없을 것으로 보고 이 차관과 교역 및 합작사업을 연결시키기 위한 전략수립에 부심하고 있다.

소련측은 모스크바회담때 주요생필품 등 현물형태의 상업차관을 포함, 50억달러 정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측은 현금차관 3억~4억달러를 포함해 20억달러내외의 종이, 냉장고, 비누, 세탁기 등 생필품중심의 합작투자를 위한 차관을 향후 5년간 제공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각 기업들은 이같은 규모의 차관은 모두 소련연방 外換銀行인 브네쉬코눔뱅크 (Bank for Foreign Economic Affairs) 를 대상으로 소련에 흘러들어간 뒤 다시 對韓經協자금으로 활용될 전망이어서 이 몫만큼은 확실한 經協사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종합상사 등 소련진출 기업들은 소련연방정부로부터 각 공화국으로 권한이양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모스크바 외에도 나훗카, 카자흐, 우즈베크 등지에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를 개설, 각 공화국을 상대로 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 V. 蘇聯의 亞·太進出에 따른 南北韓關係 展望

### 1. 韓蘇修交와 南北韓關係

1990년 9월 30일 (뉴욕 현지시간, 서울시시간 10월 1일) 양국 外相들이 외교관계수립 공동성명에 조인함으로써 역사적으로 새로운 장을 열게된 韓蘇修交는 蘇聯側으로서는 韓國의 資本과 技術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經濟的 利點을 얻게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한국의 경우는 美蘇 新대당트의 背景下에 韓半島의 脫 冷戰化는 물론, 이를 바탕으로 東北亞의 和解와 協力の 새로운 地域秩序創出에 主導的 役割을 擔當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것이 북한에 대하여 갖는 의미는 한반도에서 북한만이 정통성을 누린다는 입장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 되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소련은 이를 통해서 한반도에는 두개의 國家가 存在한다는 것을 公式的으로 인정해 버렸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韓蘇修交의 基本目的은 韓半島에 平和를 이룩하고 南北韓 關係를 改善하는데 있다. 그러나 한·소수교 그자체가 현재 북한에게 주는 의미는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 고립감의 심화일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 平和追求는 美國과 蘇聯이 共同으로 北韓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만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즉 國際的 外壓이 韓半島 內部로 이어지려면 南北韓의 직접교섭으로까지 連動되지 않으면 안된다. 冷戰의 孤島로 남아있는 韓半島의 脫 冷戰化를 위하여는 南北關係改善이 前提가 되어야 함은 두말할 必要

가 없을 것이다. 현재 북한은 대단히 困境에 빠져있을 것이므로 북한 스스로가 軍事費의 지나친 부담에서 벗어나서 이 여력을 經濟建設에 돌리도록 한국이 그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韓半島의 緊張緩和, 軍縮問題에 대하여 이제는 한국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이니셔티브를 쥐고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推進해야될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점을 留意할 필요가 있다.

한편, 韓蘇修交를 계기로 한반도의 脫 冷戰化를 보다 可視化하기 위해서 최근 北韓이 提議한 軍縮案<sup>89)</sup>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등 前向의 태도를 보임으로써 北韓을 협상태이블로 유도해야 한다. 이 경우 고르바초프 圖式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시말해서 '合理的 充分性 원칙'<sup>90)</sup>을 바탕으로 南北韓 軍備統制를 구현하기 위하여는 韓國의 적극적 태도가 요망된다. 韓蘇修交 이후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韓半島 內的 狀況'의 무게를 직시하는 것이다. 대단한 무력감에 빠져있는 北韓을 계속해서 코너에 모는 행동은 현명치 못할 뿐만아니라 '7·7 精神'에 어긋난다. 北韓을 改革, 開放쪽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南韓은 蘇聯과 合勢하는 자세를 止場, 오히려 美·北韓 接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는 우리의 統一方案인 韓民族共同體의 한 파트너를 起死回生시켜야 한다. 만일 이러한 '民族文化 共同體意識'이 없다고 한다면 한반도는 '4+

89) 자세한 내용은 외교안보연구원, 主要國際問題 分析, 90-29(서울:외교안보연구원), p. 5의 표1을 참조로 할 것.

90) 崔 榮, 前揭文, pp. 27~28.

2'방식에서 헤어날 수 없을 것이다.

북한 역시 어떠한 형태로든 변해야 하며 변화의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을 해야만 한다. 주변상황을 볼때도, 일본은 정치적 영향력의 提高와 남북간의 중재역할을 기도하기 위하여 북한과의 수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북한이 일단 '核安全 協定'에 조인한다면 북경에서 참사관급으로 진행되고 있는 접촉을 공사나 대사급으로 격상시킬수 있다고 示唆한 바 있다. 따라서 북한이 남한과의 會談에서 軍縮 및 경제협력 문제에 있어 협상과 합의를 통해서 신뢰를 구축하고 핵안전협정 및 주한미군 철수문제 등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미국과 화해할 의사를 보인다면 美·北韓間 관계개선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다면 南北韓이 대화와 협상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일일 것이다.

## 2. 韓·蘇修交 이후 우리의 課題

韓·蘇修交는 自主와 主體를 확보하게된 우리 外交의 성공적인 결실인 동시에 커다란 도전의 시작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같은 외교적 결과 역시 어차피 우리가 추구해온 북방정책의 시간표에 포함돼 있었던 만큼 결국 국제사회에서의 동등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할 후속조치에 우선적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우선 우리측은 소련에 대해 한반도의 문제, 즉 南北관계의 획기적인 轉換을 위한 소련측의 협조를 선결과제로 삼아야 한다. 韓蘇修交가 장기적으로는 韓半島의 緊張緩和와 平和定着을 위해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남북대화의 진전된 분위기에 역기능을 초래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 우리로서는 이 점을 제일 먼저 경계해야 될 것 같다.

이는 다시말해 한반도에서의 평화무드지속을 위한 안전장치를 담보 받는 동시에 南北關係의 前途와 관련해 우리가 취하여야 할 이니셔티브의 정당성을 소련측에 설명하는 일이다. 유엔加入問題 및 南北韓 軍備統制, 平和協定締結 등 현재 남북한간에 논의되고 있는 주요 현안들에 대한 원만한 타결을 위해 소련측의 助力이 우선 필요하기 때문이다.

韓蘇修交는 결과적으로 蘇聯과 北韓과의 관계를 당장은 어색한 분위기로 만들어 놓았지만 蘇聯의 對北影響力은 계속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련카드를 통해 '對北外壓'을 어느정도 피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日·北韓 關係改善이 전격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소련카드의 적절한 활용은 매우 긴요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한국은 소련을 어떻게 이용하여 南北韓關係의 돌파구를 열 것인가'라는 問題를 提起하면서 概念的 原則에 확신을 하면서도 구체적인 모델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학계의 실정이며, 이는 앞으로 더욱 깊은 연구를 요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상식적 차원에서의 기본



방향만이라도 제시해 보기로 한다.<sup>91)</sup>

첫째, 소련을 통한 援助型 對北韓經濟協力の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를 쉽게 말하면, '돈은 한국이 내고 그 돈으로 소련이 북한을 지원하는 여러가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둘째, 소련을 통한 외교활동이 가능하리라 본다. 즉 한국의 대북한외교활동을 소련이 대행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이 對北韓對話의 효과를 얻는데 목적이 있다면 구태여 상면하지 않으려는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셋째, 소련을 통한 기타 모든 비정치적 대북한교류를 해야한다. 각종 형태의 경제협력에 관한 대북한 교류는 물론, 심지어 문화교류에 이르기까지 소련은 한국을 대행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韓蘇修交에 임하는 한국의 대북한자세는 보다 수용적이고 이해하는 자세로 가능한 한 '모스크바를 통해 평양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은 이를 적극적으로 그러나 진정 겸허한 태도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韓蘇修交과 蘇聯을 통한 유연한 對北韓接近은 韓·中關係 改善에도 긍정적 변수로 작용할 것이 틀림없다.

이밖에 소련과의 수교를 기점으로 양국관계가 선린우호관계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먼저 '過去史의 整理' 問題를 해결해야 한다. 벌써부터 兩國 頂上會談을 통해 언급돼야 할 항목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KAL기 격추사건에 대한 소련측의 遺憾表示 問

91) 金裕南, "한소관계발전과 남북한 관계," 민족지성 7월호(서울:민족지성, 1990) p. 51. 참조.

題이다. 兩國의 새로운 관계를 국민적인 共感과 合意으로써 출발시키기 위해 우리측은 이 문제에 대한 整理過程을 거쳐야 하며 이는 소련을 위해서도 소망스럽다는 점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sup>92)</sup>

두번째가 經協問題인데 이 문제역시 互惠的인 次元의 냉철한 接近이 요망되고 있다. 경제협력을 위한 파트너쉽을 우선 확인해야하며 일방적인 經濟支援이 가능할 만큼 우리가 소련에 비쳐졌다면 그 자체가 虛像이란 점을 認識시켜줘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중급소비재의 새로운 시장으로 對蘇活路를 개척한다든지 우주항공·유전자공학 등 소련의 첨단기술과 이론을 우리의 제품생산능력과 접목시키는 방안 등도 긍정적인 同伴者 관계를 위해 매우 구체적으로 협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韓蘇修交로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보다 탄탄한 지위를 확보하게 됐지만 이의 적절한 운영여하에 따라 그 지위의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내고 궁극적으로 韓半島의 平和定着을 圖謀하자는데 우리의 北方政策이라고 한다면 이것과 蘇聯의 亞·太進出政策의 합작품인 韓·蘇修交는 韓半島 平和定着을 향한 힘로의 첫번째 관문통과라고 해야할 것이다.

韓·蘇修交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소련의 亞·太進出이 統一의 기반이 되는 韓半島 平和定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므로 우리는 蘇聯의 亞·太經濟進出을 同伴者적 입장에서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92) 한국일보, 1990년 10월 5일자.

## VI. 結 論

韓蘇修交에 이어 中國과도 사실상 외교관계를 수립하려는 단계에 이름에 따라 이제 韓國은, 美·日·中·蘇등 東北亞 4強과의 사이에 조정된 새로운 역학관계를 능동적으로 운용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는 일 만이 남아있다. 결론으로 본 논문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對北韓政策의 방향에 대해 언급해 보고자 한다.

우선 對北韓政策의 목적은 무조건적인 통일이나 北韓의 몰락이 아니라 성공적인 통일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이 스스로 개혁, 개방의 길로 들어설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中·蘇를 통한 경제·군사적 압력을 도모하면서 美·日등 서방 선진국가들의 對北關係改善을 가급적 억제, 차단하여 국제적으로 북한을 고립시키자는 주장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권력의 세대교체, 경제적 곤란, 脫이데올로기의 세계적 조류라는 3각파도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은 머지 않아 개혁과 개방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보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전제하에 한국 정부는 ① 不可侵宣言이나 頂上會談을 통한 政治·軍事的 信賴構築에 인식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분단은 국제적 요인 못지않게 민족내부의 갈등에 연원하는 부분이 많아 분단해소의 주안점 역시 남북한의 직접적인 화해에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남북의 실질적인 신뢰관계구축만이 남북관계를 한민족공동체의 테두리로 끌어들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평화정착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단독적인 유엔가입도 당분간 보류하는

것이 좋다. ③ 북한의 안정적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북한의 고립과 몰락을 재촉하는 것보다 현실적이다. 남북한간의 信賴構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몰락위기에 처할 때 한반도의 평화는 오히려 위험한 상황에 빠질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韓蘇修交 이후 유리한 주변정세를 이용, 독일식 흡수통합이나 북한의 루마니아화 수준을 상정한다면 현재의 남북대화가 걸돌 수 밖에 없을 것이다. ④ 북한의 안정적 변화뿐만 아니라 統一費用을 줄이고 통일 이후의 예견되는 사회·경제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북한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經濟再建의 支援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아끼지 말아야 한다. ⑤ 7·7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日本뿐만 아니라 美·英·獨·佛·伊 등과도 관계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주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과의 경우 처럼 일방적인 對北接近을 결과적으로 허용하게되고 북한의 경제를 왜곡시킬 가능성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탈냉전적 국제조류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이 國際的 好機를 무모한 對北壓力에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개방을 돌이킬 수 없는 기정사실로 만들어가는 노력에 연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론적으로 한반도에서의 진정한 평화정착을 이룩할 수 있는 길은 南北韓間의 직접적인 대화 및 화해를 통해 民族自決의 統一基盤을 造成하는 일이다.

蘇聯의 亞·太地域 經濟進出이

韓半島 統一環境에 미치는 影響

---

1990年 12月 15日 印刷

1990年 12月 28日 發行

發行處 統 一 院

調查研究室(第3)

電話: 720-2426, 2143

研究責任 金 裕 南

印刷處 陽 東 文化 社

---

국통조 90-12-115

<비매품>

